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Ⅲ)

인쇄/1999년 10월 4일

발행/1999년 10월 7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국제관계연구소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7 팩시밀리 901-2543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73-7

6,500원

역사학회의 총서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Ⅲ)
-장기·포괄적 접근방안-

제30회 국내학술회의('99.8.11) 발표논문집

통 일 연 구 원

○본 자료는 1999년 8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통일연구원 제30회 국내학술회의의 회의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통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차례 -

축 사
개 회 사

한완상(전 통일원장관)
곽태환(통일연구원장)

**대주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통일환경 조성방안
- 미국, 일본, 러시아의 시각』**

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미국·남북한의 3각구도와
 한국의 정책대안 1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과 수교전망 32
 배정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러시아 60
 고재남(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 토 론 93

회의일정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완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세기 마지막 8·15를 기념해서 통일연구원이 이런 좋은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박태환 신임원장께서 취임하시고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능력 있고 비전 있는 새로운 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개최되는 이 회의를 저는 특별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의 적절성과 적시성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과업입니다. 때문에 21세기를 앞두고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핵심사업이 바로 이것이고 근본사업도 바로 이 해체작업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현 정부의 개혁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시대적인 문제를 놓고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하여 우리가 꼭 물어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냉전구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심화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냉전구조가 심화되었다는 것은 제도화·내면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세력이 냉전구조의 시작과 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한 세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는 것은 우리 조국의 21세기 진입을 더 힘차고 보람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세계와 모든 나라들이 냉전이후시대로 이미 진입하면서 새로운 정보화 21세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는 냉전 족쇄에 걸려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들어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반도 냉전구조의 시발에 대해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국제적 힘이 재편성되는 과정에서 강대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냉전구조는 6·25를 거치면서 심화되었고 분단은 더욱 고착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남북 권력주체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냉전구조의 고착은 냉전문화의 재생산 그리고 권력주체의 공고화와 연관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민족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은 심하게 괴리, 상충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냉전 형성과 심화에는 외세뿐만 아니라 내부 권력주체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과 해체 작업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회의에서는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다루면서 남한과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동북아에서도 다자간 안보 협력체제 같은 것을 구성하여 궁핍과 고립에 빠져 있는 북한을 참여시켜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냉전구조 해체작업에 도움이 되는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서독의 경우에 유럽안보협력기구가 공헌했던 것을 참고로 한다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냉전종식을 위해서는 한·중, 한·러 간의 외교관계가 이루어졌듯이 북·미, 북·일 간의 외교관계 수립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미국·일본은 서울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등 관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식민지 통치기간에 그들이 자

행했던 행위에 대해 배상금을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자간에 지역협력체제가 구성된다면 이 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북한의 고립과 궁핍을 해결하는 문제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효과 있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비 통제문제도 이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논의될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탈냉전 의지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현재 남북한간의 힘은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총체적 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강자가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있어야 관계개선에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계적 상호주의의 부적절성에 대한 정책적인 자성과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유 있는 남쪽부터 그간 제도화되고 내면화된 냉전제도와 냉전마인드를 해체하는 작업을 꾸준히 실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업이 성공해야만 모든 분단재생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이 비용을 평화를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주제 하나 하나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반도 냉전해체를 위한 대화가 남북 당사자간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힘의 우위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원점에서 서서 냉전적 대결정책의 요소들을 재검토하고 극복해 나가는 의지와 정책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쪽은 햇볕정책을 위장된 흡수통일정책의 하나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 의심을 적극 풀어주면서 햇볕정책의 진의가 ‘공변공영’, 즉 함께 변해서 함께 번영해 나아가는 일, 민족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남북한당국이 냉전구조 해체작업을 위한 대화를 시작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남쪽은 다자간 지역 협력체를 적극 검토하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남북당사자가 이런 지역간의 협력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경제협력을 위한 거대한 계획, 이를테면 2차대전 이후의 마셜플랜 같은 것을 남북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낸다면 냉전종식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과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결론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정책당국자들이 정책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발표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새로 취임한 꼭태환 원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 8. 11

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한 완 상

개 회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완상 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님. 소중한 축사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 사회를 맡아주실 안병준 교수님, 주제발표를 해 주실 고재남 교수님, 저희 연구원의 박종철·배정호 박사님, 토론을 해 주실 이채진·유승남·백광일 교수님, 송영선 박사님, 양승함 교수님, 그리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본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은 지난 2월 26일 김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전략」을 주제로 1차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8일에는 통일연구원 창립 8주년을 맞아 같은 주제로 2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54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3차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의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차 회의는 북한의 금창리 지하의혹시설을 둘러싼 미·북한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최된 국내 최초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을 다룬 학술회의였습니다. 1차 국내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비롯하여 정책적 고려사항 및 단계별 전략방향 제시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총론적인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2차 국제학술회의는 당시 미·북간 금창리 협상이 타결되고 때마침 북·미간의 새로운 미사일 협상이 재개된 시점에서 열림으로써 내외의 관심을 끌었던 회의였습니다. 2차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특히 관련 4대국의 석학들과 정책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우리가 북한에게 무엇을 주

고 무엇을 받아야 할 것인가,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또한 북한의 포용가능성과 전망은 어떠한가 등의 문제들에 관하여 국제적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1·2차 학술회의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 가운데에는 특히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김대통령의 포괄적·단계적·일괄타결 접근은 임기응변적이거나 일회적인 대안제시가 아니라 한반도 전쟁재발 여유를 뿌리뽑는 근본적 구상으로서 역사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제안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 있어서는 긴밀한 국제공조체제가 필수적이며, 또 북한의 거부반응시 위기관리대책도 빈틈없이 용이주도하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냉전적 사고와 제도관행을 청산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적 합의의 형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3차 학술회의에서는 특히 그 동안 1·2차 국내·국제학술회의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시각을 심층분석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을 평화와 통일에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이 토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그리고 방청석의 전문가들에게 고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학술회의에 출석을 해 주신 한완상 박사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금번 학술회의가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999. 8. 11

통일연구원 원장 꺾 태 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미국·남북한의 3각구도와 한국의 정책대안

박 종 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한반도 냉전구조의 성격과 전개과정

가. 한반도 냉전구조의 성격

세계적 냉전의 기원과 전개과정¹⁾, 종결과정, 그 여파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것은 냉전이 오랜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시기마다 동태적 성격과 주요 행위자간의 역학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냉전구조는 정형화(定型化)되고 결정화(結晶化)된 것이라기 보다는 유동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냉전구조를 형성하는 각 요소와 층위(層位)들의 상대적 비중과 상호관계가 유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냉전체제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기별·지역별로 냉전구조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냉전의 해체과정도 달

1) 예를 들면, Harvard University의 Philip Zelikow는 냉전의 전개과정을 다음과 같이 8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형성기: 1943~1946, ② 미국의 방어적 입장 기간: 1947~1952, ③ 미국우위의 준비기간: 1952~1957, ④ 위기기간: 1957~1962, ⑤ 미·소대탕트기간: 1963~1975, ⑥ 마지막 위기, 제3세계에서 미·소경쟁: 1976~1985, ⑦ 2차 대탕트: 1986~1989, ⑧ 냉전의 종식: 1989~1991. Philip Zelikow, Lecture on The Cold War in World History, Harvard University John F. Kennedy School, 1997 Fall Semester.

랐다고 할 수 있다.²⁾

냉전종식 이후 냉전의 핵심적 전장이었던 유럽은 독일통일과 유럽 연합의 탄생, NATO의 확대 등을 통해 신질서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동유럽, 중동, 아시아지역은 아직까지 탈냉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냉전의 전방기지이자 화약고의 하나였던 한반도는 아직 냉전구조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논의의 초점을 한반도로 옮겨 보면, 한반도 냉전구조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한반도 냉전구조는 세계적 냉전구조의 지역적 소체제이다. 한반도 냉전구조는 세계적 냉전구조로부터 영향을 받는 한편, 역으로 세계 냉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한반도 냉전구조는 세계적 냉전구조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자생력을 유지하는 자율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한반도 냉전구조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분단국의 통일문제이기도 하다. 동유럽에서 이데올로기의 구속이 제거된 뒤 인종적·종교적·민족적 갈등이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반도에서는 아직까지 이데올로기의 구속력이 민족문제를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한반도 냉전구조는 남북한 내부,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다차원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우선 남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질서와 사회구조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하층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차원에서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이 중간층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 동북아

2) 탈냉전의 유형을 독일의 교류·협력형, 유럽의 신뢰구축형, 미·소의 압박·굴복형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김계동,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국제적 탈냉전의 유형과 선택적 대안,” 한국전쟁연구회, 한국언론재단 주최, 「한국전쟁의 회고와 과제: 새 천년의 의미」, 1999. 6. 25.

지역의 양자적 및 다자적 역학관계가 한반도 냉전구조의 표피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세 층위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존관계에 있다. 그 가운데서 중간층에 해당하는 남북한 갈등구조는 하층인 남북한 내부구조와 표피층인 동북아질서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한반도 냉전구조는 엄밀하게 보면 냉전시대의 유산과 탈냉전 상황의 이중적 산물이다. 한편으로는 냉전의 역사적 유산의 그림자가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져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탈냉전의 유동성이 한반도 냉전구조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냉전의 역사적 유산인 북한의 폐쇄적 동원체제, 정전체제, 한·미동맹, 중·북동맹 등이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며 국제환경 변화에 대해 놀랄만한 저항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탈냉전 이후 현상인 북한의 체제위기,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 미·일신안보협력, 일본의 군사력증강, 중국의 군사현대화 등이 한반도 냉전구조의 다차원적인 성격을 증가시키고 있다.

나. 한반도 냉전구조의 전개과정

한반도 냉전구조는 크게 보면 세 기간에 걸쳐서 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기간은 분단과 냉전구조 형성기(1945~50)이다. 이 기간 동안 냉전 초기 단계에 있던 미·소 대립구도와 한반도내 정치세력의 갈등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단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분단구조는 유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아직 세계적 냉전구조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반도내에서 남북한의 정치세력간 이념적 구획화가 고착화되지도 않았었다.

두 번째 기간은 냉전구조의 고착화와 남북한의 체제경쟁기간(195

3~80년대 말)이다. 한국전쟁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정적 계기였다. 한국전쟁은 남북한을 이념·체제면에서 완전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경쟁관계로 만들었다. 아울러 한국전쟁은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구조를 확대시키는 촉발요인이 되었다.³⁾ 한국전쟁이 발발하기전 남한은 미국의 방어권에서 제외되었으며 주한미군이 철수하였으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한은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가로 아시아냉전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남북한은 냉전구조 속에서 차별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경쟁관계에 돌입하였다. 남한은 한·미동맹의 안보우산 속에서 안보를 보장받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수출산업화전략을 통해서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는 데 성공하였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지원과 내적 동원화전략에 의해서 안보위협과 경제발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였다.⁴⁾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남북한에서 상이한 가치체제와 계층구조, 정치세력을 만들어 냈다. 세계적 냉전구조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냉전구조가 역사적 지체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냉전기간 동안 남북한 각각에서 서로 다른 가치체제와 이익을 지닌 지배계층이 차별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 미·소데탕트는 한반도에 잠시 동안의 대화모색기를 가져왔다. 이것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외적 환경을 형성하였던 미·소 냉전구조의 변화에 대해 한반도 소지역체제가 적응을 시도한 것이었

3) 한국전쟁이 미국의 냉전전략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Robert Jervis,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Cold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4, No. 4 (December 1980)

4) 냉전체제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남북한의 체제경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박종철, "남북한의 산업화전략: 냉전과 체제경쟁의 정치경제, 1950년대~1960년대," 『한국정치학회보』, 29집 3호(1995), pp. 223~247.

다. 그러나 국제적 냉전체제의 구조적 제약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이미 차별적인 체제를 형성한 남북한은 다시 냉전구조의 틀 속으로 복귀하는 노선을 택하였다.

세 번째 기간은 1990년대이다. 이 기간 동안 남북한이 탈냉전후 유동적인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냉전구조의 불가측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이 기간에는 냉전구조의 관성이 지속되는 한편, 탈냉전의 새로운 긴장요인이 중첩되어 나타났다.

19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이 결합되어 한·중수교 및 한·러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의 한 축이 무너졌다.⁵⁾ 이것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로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생존의 활로를 남북한공존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모색함으로써 냉전구조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체제생존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수단으로 미국과의 사이에 놓여진 장벽을 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주도하는 냉전구조 해체 방안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의 문을 두드림으로써 탈냉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차원에서 미·일신안보협력,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 중국의 군현대화 등도 한반도 냉전구조의 성격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이다. 요컨대 현 시점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는 냉전의 역사적 유산과 탈냉전 이후 상황인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동북아시아의 불안요인 등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이다.

5) 한국의 북방정책을 한반도냉전구조 해체의 시발점으로 삼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길정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통일연구원 제29차 국내학술회의, 「한반도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전략」, 1999. 2. 26.

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필요성과 방법

가. 필요성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새삼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때문이다. 첫째,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교류·협력확대정책이 직면한 어려움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남북한 간 교류·협력은 잠수함침투사건,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서해교전사태 등과 같은 군사적 긴장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군사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하고자 하는 정경분리원칙의 성과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두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냉전구조 해체에 의해서 남북한의 상호안보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교류·협력의 성과는 모래위에 쌓은 성과 같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재인식된 것이다.⁶⁾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을 계기로 북한의 생존전략을 재검토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인식되었다. 체제위기와 안보 열세에서 비롯된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은 북한의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체제보장을 함으로써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이나 도발행위에 대해 사안별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반도 냉전구

6) Jongchul Park, "Seoul's Engagement Policy towards Pyongyang: Setting, Framework, and Conditions," *Korea and World Affairs*, Vol. 23, No. 1 (Spring 1999), pp. 22~23.

조를 해체함으로써 게임의 양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문제의 국제화에 대해서 일정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통일과정과 통일후 한반도 및 동북아질서의 개편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신질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것은 통일과정과 통일후 상황에서 주변국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한편, 한국이 구상하는 국제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가겠다는 입장의 표현이다.

나. 대상과 방법

그렇다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반도 냉전구조는 남북한 내부, 한반도, 동북아 차원에서 각각 무엇을 해체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각각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해체를 목표로 해야 하는가 문제가 대두된다.

첫째, 남북한 내부 차원에서 해체 대상은 냉전적인 법적·제도적 질서와 관행이다. 특히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는 북한의 폐쇄적 발전 전략의 수정, 한반도 사회주의화 포기, 국제규범 준수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사실상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중기적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냉전구조 해체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공존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제한적 목표를 수용할 수 있는 북한의 정책변화를 일차적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차원에서 냉전구조 해체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과 같

7) 허문영,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시론)”, 통일연구원 29차 국내학술회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등구조를 평화공존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평화 체제전환, 군비통제, 남북화해·협력이 달성되어야 한다.

셋째, 동북아차원에서 냉전구조 해체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미·중관계⁸⁾, 일·중관계 등 양자관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한편, 다자차원에서 상호의존 및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의 변화를 지향한다. 그러나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 동시에 그것도 각 차원에서 같은 정도로 냉전구조 해체가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힘들다. 세 가지 차원간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각 차원마다 변화 정도가 다른 불균형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북한의 변화나 동북아차원의 변화보다 한반도차원에서 남북한간 군사적 갈등과 대결구조의 청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적 순서(sequence)를 고려하면, 한반도차원의 변화가 선행하고 북한의 변화나 동북아차원의 변화는 나중에 진행될 것이다. 또한 세 가지 차원 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면, 북한변화나 동북아차원의 변화는 남북한평화공존을 수립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변화나 동북아질서의 변화도 그 자체로서 장기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초점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냉전질서를 평화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정책변화와 동북아평화구조를 어떻게 유도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

8) 김일평은 특히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있어서 미·중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이 대만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중국이 북한문제를 미국에게 양보하는 것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관건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일평,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중국·미국의 역할,” 통일연구원 주최 제8차 국제학술회의, 「한반도냉전구조 해체방안(II)」, 1999. 4. 8.

한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협상틀로는 미·북대화, 4자회담, 남북대화가 있다. 미·북대화의 초점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에 있으며,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남북대화는 남북화해·협력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상황의 진전상태에 따라서 새로운 양자간 협상창구나 3자회담, 다자회담이 구성될 수도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회담통로간의 역할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목표와 추진방법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 미국과 남북한의 인식과 접근방법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구상한 것으로서 미국과 북한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기존 입장을 토대로 이에 대한 반응을 예상할 수는 있다. 특히 페리보고서에 의해 표명될 미국의 대북 포괄적 접근은 미국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된 목표, 정책과제, 정책수단 등에 대한 미국과 남한, 북한의 인식과 접근방법을 비교하고자 한다.

가. 목표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라는 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문제이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테이블에 마주 앉아 협상을 하게 된 것도 NPT 체제유지라는 세계적 비확산정책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대량파괴무기의 전달수단인 미사일확산문제에 대해서도 핵확산방지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이나 급격한 통일보다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평화구조의 정착을 선호한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한반도통일을 지지하지만 그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정과 혼란을 감수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선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한반도의 현상변화를 가져 올 냉전구조 해체보다는 북한문제의 관리라는 현상관리와 위기관리를 더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동북아역학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한편, 한반도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남한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의해 남북한 평화공존체제의 정착을 목표로 한다. 그 동안 한반도현상변화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지녀온 남한이 현상타파적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남한은 그 동안 한·미동맹체제에 의해 대북역지력을 유지하는 한편, 교류·협력에 의해서 남북한간 공존영역을 넓히고 점차적으로 정치·군사면에서 긴장완화를 추진하는 신기능주의적 시각에 입각해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한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제기함으로써 교류·협력과 함께 정치·군사문제의 해결을 좀더 적극적으로 병행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은 가능하면 마지막 단계까지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역지력을 유지하면서⁹⁾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평화공존체제

9) 주한미군문제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4월 6일 “북한이 최근 미군이 평화군으로 있다면 남한에 주둔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함으로써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후 국가안보회의는 4월 8일 주한미

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그 동안 적극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시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과 같은 전면전이나 각종 군사적 도발과 침투행위를 통해서 한반도의 현상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했다. 아직까지 북한은 한반도의 현상변화와 사회주의혁명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위기와 국력열세에 직면한 북한의 잠정적 목표는 체제 생존과 열세극복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이념 및 군사력증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건설을 추진하는 강성대국을 국가목표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최대 관건이 대미·일관계 개선에 있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한편, 더 나아가서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고 있다.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지원 확대와 대북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에 의해 경제적 활로를 찾고자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이라는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대일 및 대서방국가와의 관계진전이

군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였다. 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적으로 한·미간 문제이며, 남북간이나 미·북간 논의될 사안이 아님. 한반도에 침략의 위협이 있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적임. ②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모든 군대의 구조나 배치문제 논의가 가능함. 이 때는 남북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능함. 이는 4자회담에 임하는 한·미공동의 입장임. ③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미군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함.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 정책과제

미국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과 관련하여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방지, 한반도평화체제 전환, 한·미동맹체제 유지, 남북 관계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미국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라는 세계전략에 입각하여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미사일 개발 방식을 일차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국제적 커넥션을 지니고 추진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4자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창구를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평화문제의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찰스 카터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를 '한반도평화회담 특사'로 임명하여 4자회담문제를 전담시킴으로써 한반도평화정착에 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이 한·미동맹체제의 골격을 뒤흔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미국은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안정을 위해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기보다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등 양자동맹체제에 일차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한반도통일후에도 한·미동맹체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균형자적 역할을 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¹⁰⁾

10) 할페린(Halperin)은 한반도통일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지속되어야 하지만, 통일한국에서 주한미군은 현재 수준이나 또는 감축된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울러 중국의 반대를 고려하여 주한미군을 40도선 이남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신뢰구축조치, 중국 및 러시아의 한반도국경지역 병력배치 제한, 동북아비핵지대 설치, 다자안보협력체제

넷째, 남북관계 진전은 미국의 정책과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며 미·북관계 진전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은 남한의 주도와 북한의 상응하는 양보로 남북한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매 사안마다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한·미정책협의를 통해서 미·북관계 진전의 범위와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미·북관계 진전과 남북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단기적 차원에서 두 쌍의 양자관계의 동시병행추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구체적 정책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¹¹⁾ ①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남북화해·협력 ②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의 시작 ③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 ④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위협을 제거하는 등 군비통제 실현 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통한 통일상황 이룩.

남한이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 정책과제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남북화해·협력과 북한의 대미·일관계 진전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대량파괴무기개발 중지 및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내겠다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체제보장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주한미군철수와

구축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Morton H. Halperin, "U.S. Security Objectives after Korean Unificatio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ne, 1998, <http://www.foreignrelations.org>

11) 김대중 대통령의 CNN인터뷰, 1999. 5. 5; 김대중 대통령 월례 기자간담회, 1999. 5. 17.

북·미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북·미평화협정의 과도적 단계로서 북·미잠정협정 체결과 북·미군사공동위원회 가동¹²⁾,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지위변경¹³⁾ 등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중 및 한·러수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미·북 및 일·북국교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냉전구조가 해체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궁극적으로 한·미·일공조체제가 해체되고¹⁴⁾ 북한을 포위한 자본주의체제가 붕괴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미·일안보협력지침, 일본의 군사력증강, 일본의 TMD개발 참여 등도 청산되어야 할 냉전구조라고 여기고 있다.

다. 정책수단

미국과 남한이 대북관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경제지원,

12) 북한은 1995년 1월 평양을 방문한 릴리(James Lilley) 전 주한미대사 일행에게 북·미평화협정에 이르는 중간조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조·미관계의 진전,” *세계*(일본), 1995. 4; 또한 1995년 9월 북한을 방문한 셀리그 해리슨(Selig S. Harrison)에게도 북한은 북·미잠정협정과 「북·미상호안보협의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리그 해리슨과의 인터뷰, 「중앙일보」, 1995. 9. 8; 그리고 북한은 1996년 2월 외교부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미잠정협정 체결과 북·미공동군사기구 등을 포함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북한외교부 대변인 담화,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안에 관한 담화,” 「평양방송」, 1996. 2. 22.

13)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을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간헐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종혁, 1996. 4. 미조지아대 학술회의, “미·북 양측이 평화조약을 모색하는 동안 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4자회담 2차 본회담, 1998. 3. “미군철수대신 미군 또는 외국군대의 지위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14) 한호석, “평화회담 제안과 군비증강의 모순,” 「통일논의」 13호 (미주평화통일연구소, 1996. 7)

경제제재 완화, 개발원조, 대북투자, 미·북국교정상화 등과 같은 보상적 수단(remunerative means)과 외교적 압력, 경제제재, 군사적 대응 등의 강제적 수단(coercive means)으로 구분된다.¹⁵⁾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과 북한체제의 붕괴방지 및 안정적 변화를 위해 경수로건설, 중유제공, 대북경제제재 완화, 식량지원 등과 같은 보상적 수단을 활용해 왔다. 또한 미국은 4자회담과 금창리방문을 위해 추가식량을 북한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식량이 제공될 것이다. 경제제재 해제는 1994년 미·북제네바 합의문에서 이미 약속되었기 때문에 대북협상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북한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선물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개발원조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차관 도입 지원, 국제컨소시엄에 의한 대북투자 등도 앞으로 고려될 수 있는 대북보상수단이다. 그런데 보상 제공에 의한 협상은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매 사안마다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양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것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의 벼랑끝전략을 허용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남한이 북한에게 제공한 보상적 수단은 경수로건설, 식량 및 비료 지원, 금강산관광개발 보상 등이다. 남한은 식량 및 비료지원을 이산가족문제 및 남북대화 재개와 연계시키려고 했으나 그 때마다 북한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 결과 남한정부는 대북보상에 상응하는 북한의 양보를 기대하는 국민여론을 무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15) 집단적 동의를 획득하는 방법에는 규범적 수단(normative means, 상징조작과 집단적 규범의 적용), 보상적 수단(remunerative means, 물리적 보상의 제공), 강제적 수단(coercive means,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이 있다. Amitai Etzioni,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1), pp. 3-67.

미국과 남한이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보상수단은 미·북국교정상화이다. 남한은 과거에 미·북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진전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남북대화가 배제된 상황에서 미·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미·북관계와 남북관계의 연계고리를 끊고 오히려 미·북관계 진전이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북수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포기, 테러행위 중단,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북수교에 대한 미국내 지지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북한은 미·북국교정상화 자체보다 국교정상화과정에서 북·미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미·북수교를 통해 국제적 위상 신장,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등과 함께 한·미동맹체제의 변화를 통해 한반도군사력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남한은 유엔과 우방국을 동원한 외교적 압력, 경제제재, 군사적 대응 등과 같은 강제적 수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국제적 연계망이 약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외교적 압력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도 매우 제한적이기때문에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도 한정적이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억지력강화, 군사적 봉쇄, 무력공격 등의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군사적 수단은 중국 및 남한의 반대, 북한의 군사적 반격가능성 등으로 인해 동원하기 어려운 정책수단이다.¹⁶⁾ 1993년 3월 북한의 NPT탈퇴와 1994년 5월 북한의 사

16) 1994년 6월 북한핵위기사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가능성을 검토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편, 서재경 옮김.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 (서울: 김영사, 1998), pp. 120~133.

용후연료봉 임의추출시 유엔제재 및 선별적 군사적 대응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은 강제적 수단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한편 북한의 일차적 정책수단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과 파괴무기와 미사일의 확산위협이다. 북한의 대량과파괴무기 보유는 방어 수단, 국력열세 만회수단, 대미협상 수단 등 복합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북한의 진정한 목적인지 판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핵무기만 하더라도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 핵무기개발을 의도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그것을 대미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대량과파괴무기에 대한 상대측의 대응이 외교·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대응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북한도 협상과 대화결렬, 대북제재감수 불사, 강경대응 등을 오가는 아슬아슬한 벼랑끝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재래식 분야의 군사력과 침투, 테러, 도발 등의 위협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현대적 군사장비 부족, 식량 및 보급품의 제약, 군인 사기저하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의존수단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전반적 국력이 열세에 처할수록 북한은 최후 의존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에 더욱 의존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핵위기사 북한의 대남 '불바다위협'이 미국 및 한국의 대북 군사적 제재를 재고하게끔 하고 협상에 의한 타협전략으로 선회하게 하였던 것도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 수단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 선례가 되었다. 따라서 군사적 수단의 동원에 수반되는 위협요소와 비용이 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전체제를 위반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제한된 규모의 기습공격을 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관련 미국, 남북한의
 목표, 정책과제, 정책수단

	미 국	남 한	북 한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 미국의 균형자 역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평화공존체제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생존과 열세 극복 ○ 강성국가 건설
정 책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지 ○ 한반도평화체제 전환 ○ 한·미동맹체제 유지 ○ 남북관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화해·협력 ○ 북한의 대미·일관계개선 ○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제거, 군비통제 ○ 평화체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 ○ 북한의 대미·일 국교정상화 ○ 한·미·일공조 해체 ○ 북한을 포위한 자본주의체제 붕괴
정 책 수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적 수단: 경제지원, 경제제재 해제, 개발원조, 대북투자, 미·북국교정상화 ○ 강제적 수단: 외교적 압력, 경제제재, 군사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적 수단: 경제지원, 개발원조, 남북경협 ○ 강제적 수단: 외교적 압력, 군사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미사일개발 ○ 재래식 군사력, 침투·도발·테러 등 위협수단

4.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전망과 한국의 정책대안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는 남북한과 주변국, 국제사회가 관련되어 있지만 이중에서 중요한 행위자는 미국과 남한, 그리고 북한이다. 특히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진로는 북한의 반응 여하에 달려 있다. 앞에서 설명한 미국과 남북한의 목표와 정책과제, 정책수단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진로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전망으로 ① 포괄적 접근의 순조로운 단계적 이행, ② 현상유지와 위기관리, ③ 긴장고조와 대북압력 강화, ④ 긴장고조후 대타협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가. 포괄적 접근의 단계적 이행

북한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수용할 경우 종합적이고 단계적이며 일괄타결 방식에 의해 한반도문제의 해결이 시도될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인권 등 모든 문제가 망라될 것이다. 또한 포괄적 접근은 몇 단계를 거쳐서 진행될 것이며, 모든 현안들이 일괄타결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포괄적 접근이 이행될 경우, 미국과 북한간 협상창구가 격상될 것이며, 남북대화외의 창구도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또는 4자회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다자협의기구가 모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접근이 순조롭게 이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포괄적 접근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고 있다. 미국의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을 방문(1999. 5. 25~5. 28)하여 북한지도층에게 포괄적 대북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김영남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와 김대중 대통령 및 오부치 일본총리의 구두 메시지를 김정일에게 전달하였다. 북한지도층은 페리와외의 면담에서 1993년 미·북공동성명과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문, 미사일협상, 4자회담 등 여러 통로를 통한 대미협상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포괄적 접근에 대한 직접적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았다.¹⁷⁾

북한은 포괄적 접근에 대해서 명시적인 의사표명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미·북대화, 4자회담, 판문점장성급회담 등 대화창구를 유지하면서 회담다변화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사일개발, 군사적 긴장유발 등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대미협상레버리지를 높이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포괄적 접근을 수용함으로써 이에 구속되기보다는 2000년에 있을 남한의 총선과 미국의 대통령선거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히려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포괄적 접근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에 제공될 경제지원과 개발지원을 동원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미·북수교와 일·북수교도 미국과 일본의 고려사항과 각국의 국내정치적 요인 때문에 예상보다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이 포괄적 접근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상황으로 인해 포괄적 구도 자체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17) Report of Perry's visit to Pyongyang in May 29, 1999. William Perry Press Conference, napsnetlist@nautilus.org

나. 현상유지와 위기관리: 선별적 포용정책과 긴장발생 방지

북한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현상이 유지되는 가운데 긴장발생을 억지하는 위기관리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현상유지 및 위기관리상황에서 미국과 남한의 대북정책의 주안점은 위기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대북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일괄타결방식의 포괄적 접근은 일단 유보되는 대신, 미·북대화, 4자회담, 남북대화 등 기존의 대북접촉 창구를 통해 점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변화,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평화유지방안 등이 추진될 것이다.

이 경우 위기관리의 초점은 금창리지하시설에 대한 핵개발의혹이 일단락된 뒤,¹⁸⁾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추가발사를 저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5월초 미사일엔진의 발사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⁹⁾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지하미사일기지를 건설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²⁰⁾ 또한 미국방정보국은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이 최근 동해안 발사기지로 옮겨졌으며 시험발사가 7월중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도되었다.²¹⁾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발사 준비를 하되, 최종적인 시험발사를 유보

18) 제임스 루빈 미국무부 대변인은 금창리 지하시설에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나 재처리시설이 없으며, 현재의 지하시설 규모와 구조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 설치에 부적합하고, 재처리공장을 위해 설계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시설이 다른 핵 관련 용도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5월 2차조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U.S Department of State Spokesman, James P. Rubin, "U.S. Concludes North Korea Underground Site Not Nuclear," Washington, USIA Text, June 25, 1999.

19) 『동아일보』, 1999. 6. 21.

20) 『연합통신』, 1999. 7. 9.

21) *Washington Times*, July 16, 1999.

함으로써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을 유지하려 할 수도 있다. 북한에게 미사일추가발사 중지를 촉구한 유럽연합 외무부장관의 성명(1999. 7. 19), ARF의 의장성명(1999. 7. 26), 한·미·일의무장관의 경고(1999. 7. 27), 한·미국방장관의 공동회견(1999. 7. 29) 등이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를 억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물러섰다가 협상하는 전술을 구사하면서 최대한의 실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이 단기적으로 미사일추가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대신 대가를 받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정책은 미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제안한 선별적 포용정책(selective engagement)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외교협회 보고서는 선별적 포용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했다.²²⁾ ① 페리의 포괄적 제안 유지, ② 북한의 미사일발사나 도발시 반복할 것을 조건으로 적성국교역법 관련 대북제재 해제, ③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준수하는 한 미국도 중유 제공 등 의무사항 이행, ④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지속하되, 식량지원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해석은 유보, ⑤ 4자회담 지속, ⑥ 한·미·일 고위정책협의 지속, ⑦ 한·미·일 방위협의, 미·일방위지침 이행, 미·일의 TMD 공동연구 등 억지력강화, ⑧ 중국에게 북한의 선진무기 개발 자제를 권유하도록 함.

CFR보고서의 선별적 포용정책의 핵심은 억지력을 유지하되,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대북경제제재를 우선 해제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페리보고서도 기본적으로 북한이 양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익

2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 Second Look," July 27, 1999.

과 긴장고조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명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현실적인 판단을 하도록 할 것이다. 페리보고서는 북한이 핵·미사일개발 중단, 평화체제 전환, 군비통제, 남북대화 등에 합의하는 대신, 경제제재 해제, 미·북 및 일·북수교, 개발원조 제공 등을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상유지상황에서 남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선별적 포용정책이 될 것이다. 남한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북관계 및 일·북관계 진전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나 미사일추가 시험발사와 같은 긴장고조행위를 하지 않도록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긴장고조 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유인책의 한 가지는 개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지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경제적 보상과 교환하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개발지원은 대북지원 방향을 일회성 인도주의 지원으로부터 북한의 발전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²³⁾ 아울러 개발지원은 원조제공 조건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개혁과 개방적 발전전략을 유도할 수 있는 부수효과를 지니고 있다.²⁴⁾

개발지원의 구체적 방법은 세계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

23) Bradley O. Babson, "North Korea Economy Today: North Korea on the Brink", unpublished paper, 1999. 1.

24)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개발지원이 피원조국의 발전전략과 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서재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북한의 호응 및 개혁·개방 유도방안," 통일연구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1999. 4. 8.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북한개발기금」을 설치하여 북한이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금조성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한국, 동남아국가 등이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²⁵⁾ 그런데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회원국에 한정되기 때문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북제재조항이 해제되어야 한다.²⁶⁾

또한, 북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개발지원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북한은 1998년 5월 말 UNDP에 농업개혁을 위해 3억 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다자간 협력방식을 염두에 둔 대북농업지원 협력 요청이었다.²⁷⁾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농업개발과 산림녹화, 집단농장의 시장 경제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의 주도 하에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농업개발기구」(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Organization)와 같은 다자기구를 결성할 수도 있다.

25) 「세계일보」, 1999. 3. 16; 「매일경제신문」, 1999. 3. 16.

26) 미국은 북한을 인권침해국가로 분류하고 국제금융기관인 IMF, IBRD, ADB 등의 집행이사진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서 대북차관제공을 규제하고 있다 (Gram Amendment 및 Gonzalez Amendment). Zachary S. Davis, Larry A. Niksch, Larry Q. Nowels, et al.,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29, 1994), pp. 21~36.

27) 북한은 1998년 5월말 제네바에서 개최된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P) 회의에서 총 20억 달러가 소요되는 중·장기 식량 자급 자족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우선 1998~2000년간 홍수 피해 복구, 비료 공장 개·보수, 이모작·특수작물 재배 등 농작의 다양화, 농촌은행 및 농민시장 활성화 등 농업 기구 강화, 조림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3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였다. Report for the Thematic Round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DPRK(<http://undp-dprk.apdip.net>)

다. 긴장고조와 대북압력강화: 억지력 강화와 파국예방

북한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거부하는 한편, 긴장조성 행위를 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어렵게 하고 대미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판문점 무력시위, 잠수함침투와 같은 침투행위, 서해교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 테러행위 등을 감행함으로써 대북포용정책의 속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조절하는 한편, 대미관계 개선에만 치중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행위가 남북관계 차원에서 발생할 경우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대체로 남북한간 갈등문제로 한정하고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거나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 1968년 1.21. 청와대침투사건이나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 1983년 KAL기 격추사건과 아웅산테러사건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테러행위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는 취하는 한편, 남한이 군사적 보복조치를 취함으로써 무력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1996년의 잠수정침투사건이나 1999년 서해사태에서도 미국은 가급적 군사적 충돌의 확대를 방지하고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자 노력했다.

김대중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테러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대북포용정책의 기본골격을 유지해 왔다. 김대중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을 도발하지 않는 한 북한의 도발·침투·테러행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대응하되, 대북포용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면, 대북포용정책의 범위와 속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돌발적 긴장상태를 수습하고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는 데 노력이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추가발사나 핵동결과기와 같은 세계적 차원의 군사적 위협을 제기할 경우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북한의 핵개발은 세계전략차원의 문제로서 미·북회담이 주된 협상창구였으며, 그 결과 남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반경은 매우 제한되었다.

미사일발사문제는 핵문제에 비해서 심각성이 낮지만,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서는 국제적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서부지역에 도달하는 사거리를 지닌 북한의 미사일능력은 미국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북한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 소위 악당국가(rogue) 가운데 직접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지니는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²⁸⁾

특히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미의회의 강경반응을 유발할 것이다. 미 상원은 1998년 9월 북한의 NPT 규약준수와 미사일수출 중지를 조건으로 미국의 KEDO분담금인 3,500만 달러의 지원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대외원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²⁹⁾ 그리고 미 상하 양원은 1999년중 2단계에 걸친 3,500만 달러의 대북중유제공의 조건으로 체네바합의 준수, 미사일의 수출·개발 억제, 지원식량의 전용금지, 남북대화 등을 설정하였다.³⁰⁾ 또한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길만(Benjamin Gilman) 위원장이 1999년 5월 2000년 KEDO기금 지원의 조건으로 식량분배 투명성, 북한의 핵동결 이행, 미사일수출 및 개발 중단 등을 제시하고 북한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아태지역의 조기경보체제 구축과 북한 탈북자지원 기금조성 필요성을 제기하는 「북한위협축소법」(North Korea Threat Reduction

28) *Los Angeles Times*, July 21, 1999.

29) 「동아일보」, 1998. 9. 4.

30)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Senate Conference on the Funding for the KEDO, October 19, 1998.

Act of 1999)을 제안하였다.³¹⁾ 그리고 미하원은 1999년 7월 미행정부가 북한의 핵개발계획의 완전동결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북한과의 향후 핵협력을 규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³²⁾

미 의회의 다수를 점유한 공화당의 입장을 반영한 아마타지보고서는 북한이 포괄적 접근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억지전략을 강화하고 선제공격까지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³³⁾ 그러나 미의회의 강경반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제재를 하기에는 낮은 군사적 성공가능성, 유엔지지 획득의 어려움, 북한의 반격 유발, 중국·한국·일본·러시아의 반대, 전쟁비용 조달의 어려움 등과 같은 제약요인들이 있다.³⁴⁾

한편,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개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99년 8월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에 대해 충격을 받은 일본은 1998년 8월 31일로 예정되었던 경수로 분담금 합의문 서명을 연기하고 일·북 국교 정상화 교섭 중단, 대북 식량 지원 중단, 항공기 운항 중지 등의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다.³⁵⁾ 그리고 일본은 1999년 9월 미·일안전보장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에서 TMD개발 연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³⁶⁾ 이후 일본은 북한 핵동결을

31) "North Korea Threat Reduction Act of 1999" by Benjamin Gilman, Chairman of House International Committee on May 19, 1999. napsnet@nautilus.org

32) 길먼 하원 국제관계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길먼 위원장이 5월 19일 하원에 제출한 「99년도 북한 위협축소법안」 중 북한핵 관련 부문을 분리·수정한 것으로 국무부의 예산편성 법안에 첨부되었다. 「연합통신」, 1999. 7. 22.

33) 북한에 대한 한계선 설정과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Richard Armitag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trategic Forum, March 1999.

34) 강원식,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와 동북아 안보환경," 관동대학교 동북아평화연구소 통일문제세미나, 「북한의 대남군사전략과 한반도안보」, 1999. 6. 2.

35) 「경향신문」, 1998. 9. 4.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수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미의 견해에 동조하고, 1998년 11월 「대북 경수로 사업비 재원 분담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경수로 분담금 기여를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발사했을 경우 금강산관광사업, 대북식량지원, 남북경협 등이 일정한 정도로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경수로지원 중단, 대북식량지원 중단, 조총련계의 대북송금 중단,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가 적용될 것이다. 또한 한·미연합방위력 증강과 같은 군사적 억지력강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남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이후 군사적 공격이 가해지거나 경수로사업 중단으로 인해 핵개발 재개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CFR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발사할 경우, 북한의 기본합의 준수를 전제로 경수로사업을 지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발사시 미 의회가 중유제공 지원을 중단하고 일본도 경수로 분담금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북한이 핵동결 파기를 위협할 수도 있다.³⁷⁾ 이렇게 되면, 미사일문제와 핵개발문제가 중첩되어 건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남한은 북한 핵개발 재개와 군사적 대결이라는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경수로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36) 미국과 일본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한 미·일안전보장협의회는 1998년 9월 20일 1999년부터 TMD 구상을 위한 공동연구를하기로 합의하였다. "Joint U.S.-Japan Statement on Security Meeting," USIA Text, Washington, 1998. 9. 21.

37) 북한은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제네바합의문을 파기하면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북한외무성 대변인 성명, 「중앙방송」, 1999. 7. 26.

점을 미의회와 일본에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수로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거나 재원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이 미·일의 대북압력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남한은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통해 협상을 모색하고 이에 대해 미·일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창구가 개설될 경우, 미사일문제, 경수로사업, 평화체제, 남북대화 등에 대해서 포괄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라. 긴장고조후 대타협: 포괄적 협상을 위한 종합적 준비

그런데 북한의 긴장고조행위로 인해 대북압력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미·북 대화와 4자회담 등 미국과의 접촉창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미사일발사로 긴장이 고조된 후 미국과 북한간에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 모든 현안에 대한 일괄타결방식의 대타협이 시도될 수도 있다. 1993년 북한의 NPT탈퇴 이후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미·북협상에 의해서 제네바합의문이 타결된 것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미사일문제, 평화체제전환, 미·북 및 일·북수교, 대북개발지원 등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협상될 것이다.

포괄적 접근방식에 대한 대타협이 진행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수출 및 개발 중지 등에 대한 보상이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수출 중지 등에 대한 대가로 3년 동안 매년 10억 달러의 현금제공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금이 조성될 수도 있으며, 대북보상의 일환으로 일·북수교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대북보상이 논의될 경우, 관련국간 비용분담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북한의 미사일수출문제는 남한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또한 남한의 대부분 지역이 이미 북한 스커드미사일의 사정권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이 남한에게 추가적 군사적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계전략차원에서 미사일 확산방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 북한미사일의 중동수출에 의해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이스라엘³⁸⁾, 북한미사일개발에 대해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는 일본 등이 대북보상의 주된 제공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수출은 미사일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사일수출문제를 미사일개발문제와 완전하게 분리하기 힘들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개발은 일본의 주한미군을 위협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남한이 대북보상에 전혀 참여하지 않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남한이 대북보상에 참여할 경우,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³⁹⁾ 남한이 이미 경수로건설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있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한이 북한미사일수출 및 개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의 방위비용 분담액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한편, 포괄적 접근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질 경우, 미·북협상이 주된 협상창구가 되고 이 과정에서 남한이 배제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미·북대화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남북대화의 위상과 역할을 격상시켜야 한다.

38) 이스라엘은 1993년 북한의 미사일 중동수출 중단 대가로 운산금광 매입을 검토하였으나 미국의 저지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Time*, 1993. June. 7.

39) Jong-Chul Park, "U.S.-DPRK Missile Talks and South Korean Responses," *Korea and World Affairs*, Vol. 20, No. 4 (Winter 1996), pp. 617-619.

그리고 포괄적 대타협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포기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 안전보장을 위해 한·미안보동맹의 변화가 검토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북·미불가침협정 체결, 한·중불가침협정 체결, 한·미동맹의 지역안보협력 지향,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주한미군의 배치조정 및 단계적 철수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⁴⁰⁾

또한 동북아안보협력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안보협력은 한편으로는 한·미동맹구조의 변화 이후 한반도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외적 환경으로서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안보협력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안보협력은 이 틀 속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므로써 북한의 안보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 동북아안보협력은 한반도평화문제, 한·일협력, 대만문제, 미·일방위협력지침문제, 기타 아·태지역의 공동관심사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안보협력은 동북아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자간 신뢰구축 및 관계개선 추진, 양자관계의 보완, 민간접촉과 정부 접촉을 병행하는 Track II 접근법, 신뢰구축 우선 실시 등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0) 박종철, 「남북한 교차승인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1998), pp. 57~101.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과 수교전망

배 정 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전후 북·일관계는 글로벌(global) 수준의 국제환경, 동북아시아의 전략환경, 미국의 동북아정책, 남북한관계 및 한·일관계 등의 영향을 받으며 개선·정체·냉각을 되풀이하면서 전개되었다. 즉 전후 냉전체제 아래에서 북한의 대일본정책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일관계의 제약 속에서 비난·적대정책과 유화·접근정책을 되풀이하면서 추진되었고, 일본의 대북한정책 또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접근과 냉각을 반복하면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냉전시대의 북·일의 접근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관계개선 차원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북·일 양국은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탈냉전시대가 도래하여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자 국교정상화를 지향하여 전향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예컨대, 탈냉전기의 북·일 양국은 동서대립구도의 붕괴에 따른 국제환경의 전환기적 변화와 한국의 전향적인 북방정책의 영향을 받아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접촉을 전격적으로 추구하여 여덟 차례의 수교회담을 가지게 되었고,

미·북관계 등의 영향으로 수교회담이 좌절된 이후에는 ‘수면 아래’ 또는 ‘수면 위’에서 접촉과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북·일관계는 냉각상태 또는 정체상태에 빠져 있을 때, 대체로 ‘수면 아래에서 교섭’이 전개되는데, 이는 북·일관계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에 대해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한 뒤, 각각의 시기에 대해 다섯 개의 차원 즉 제1차원: 북·일 양국의 국내환경, 제2차원: 남북한 관계 또는 한일관계, 제3차원: 미·북관계, 제4차원: 동북아 지역의 국제환경, 제5차원: 글로벌 차원의 국제환경 등의 관점에서 과정론적 접근과 더불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북한의 대일본 정책 및 일본의 대북정책에 관한 분석과 함께 국교정상화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은 ‘II.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에서 제1기에서 제4기까지의 북·일관계의 접근과 한계성에 관하여 분석하고, ‘III. 북한의 대일본정책 및 일본의 대북정책과 수교전망’에서는 제4기의 북한의 대일본정책 및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한 뒤, 북·일 국교정상화에 관해 전망하는 것이다.

2.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에 관해서는 시기별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의
전향적 접근

제2기: 정체상태의 북·일관계

제3기: 국교정상화의 환경정비를 위한 북·일의 접근

제4기: '갈등속의 접촉', '접촉속의 갈등' 상태의 북·일관계

가. 제1기: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의 전향적 접근

제5차원의 국제환경의 전환기적 변화 즉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노태우정부는 1988년의 '7·7 특별선언'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¹⁾, 나아가 한반도의 현상타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²⁾. 이와 같은 글로벌 수준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전향적인 북방정책은 북한과 일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일본으로 하여금 전후처리의 교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국교정상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게 하였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일본과의 국교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자극하였다.

따라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직전 일본의 다케시다(竹下) 내각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였고, 나아가 일본의 가네마루 신(金丸信) 전 자민당(自民黨) 부총재는 1990년 9월 24~28일에 자민당과 사회당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였다³⁾. 한·소수

1) 「7·7특별선언」, 국토통일원, 1990.

2) 노태우정부는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90년 9월 30일에 한·소수교, 1992년 8월 24일에 한·중수교를 이룩하였다.

3)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북한방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田邊誠, 「日朝新時代の幕あげ, アジアの平和と南北統一のために」, 「月刊社會黨」(1990年 12月號) 참조.

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북한을 방문한 가네마루는 관계개선을 위한 교섭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이에 북한은 전격적으로 국교정상화를 제의하였고, 그 결과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과 북한의 노동당 사이에는 동년 9월 28일 '3당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으며, 북·일간에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었다.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면서 정치권보다는 외무성을 통한 실무차원에서 이루어져 갔다. 북·일간의 국교정상화회담은 1990년 11월 중국의 베이징에서 세 차례에 걸친 예비회담을 가진 뒤 본 회담에 들어 갔다. 본 회담은 1991년 1월 30~31일 제1차 회담을 평양에서 가진 뒤 제8차까지의 회담을 가졌다. 1992년 11월 5~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8차 회담에서는 일본측이 '이은혜문제'와 '핵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추후일정을 결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담을 결렬시켰다. 즉 일본과 북한간의 수교회담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제3차원의 미국 세계 핵전략과 북·미갈등, 제1차원의 이은혜문제 등으로 인하여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제8차 회담 도중에 중단됨에 따라, 북·일관계는 소강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은 곧 수면 아래에서 국교정상화 교섭을 위한 비공개접촉을 베이징 등에서 가지면서 협상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갔다. 나아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설치 및 일본의 참여, 미·북간의 외교대표부 교환설치 합의 등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과 북한은 수교교섭의 재개를 위한 비공식·비공개적 접촉을 본격화하였다. 그와 같은 북·일간의 접촉은 일본이 대북한 국교정상화 교섭을 정당활동의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대화로 정착시키면서 주로 일본 외무성의 동북아과장과 북한 외교부의 일본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자접촉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본정부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비공식적 접촉을 전개하면서 아울러 한·미·일 공조체제의 틀 속에서 북한을 지원한 것이다

나. 제2기: 정체상태의 북·일관계

1996년 9월에 발생한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북·일관계는 다소 제2차원인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았지만, 잠수함사건이 해결됨에 따라 북·일간의 주요 현안인 ① 일본의 대북한 쌀 지원문제, ② 과거청산을 위한 배상금문제⁴⁾, ③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재개 등이 또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북·일간 주요 현안들의 재거론과 더불어 1997년 1월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고위층 인사 상당수가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와 같은 시기에 북한의 노동당 비서 황장엽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 즉 황장엽은 북·일의 활발한 접촉이 재개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북·일간의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한 것이다(1997. 1. 30~2. 11).

그러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귀국 도중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망명함에 따라, 일본은 황장엽 망명사건의 영향으로 대북한정책의 추진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⁵⁾.

4) 일본은 1996년 8월 28~2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일 실무자 접촉에서 50억 달러의 청구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함. 이 50억 달러는 한국정부가 지난 1965년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5억 달러를 현재 물가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5) 황장엽의 망명신청의 소식을 접한 일본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체제가 즉각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황장엽의 망명으로 인하여 북한내부는 심리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황장엽 망명의 후유증은 남북관계를 긴장시키고 4자회담의 개최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북·일수교교섭 등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보았다. 그리고 황장엽 망명사건에 대해 북한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황

특히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안명진(安明進)이 1997년 3월 12일 일본의 「산케이신문(産經新聞)」과의 인터뷰에 응하여 1988년 10월 평양근교에 있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요코다 메구미’를 목격한 상황 등을 증언함에 따라⁶⁾, 일본정부는 대북한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악화, 야당 신진당(新進黨)의 대북한정책 비판 등을 의식하여 대북한정책의 전개에 한층 신중하고도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현안인 식량지원문제에서도 신중하게 응할 것임을 되풀이하여 표명하였다. 즉 1997년 2월 23일 일본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 식량지원 계획에 동참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동년 3월 27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족들이 연락모임을 결성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북한 국교정상화 협상이 이은혜문제로 결렬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일본인 납치문제 때문에 식량지원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⁷⁾. 그리고 동년 4월 16일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은 일본 국회의 한 위원회에서 북한에게 일본인 유괴의혹의 해명을 촉구하였음을 밝히는 한편, 대북한 식량지원문제에 관해서는 우방국들과 정보와 견

장엽의 망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는 비교적 순탄한 국면을 맞이하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대북한정책의 전개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다.

- 6) 1997년 3월 13일자 산케이신문에서는 요코다 메구미를 비롯한 일본인 납치·유괴사건을 1면 톱기사로 크게 보도하였다.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사건은 요코다 메구미 사건 이외에도 6건이 있다. 한편 북한은 1997년 3월 18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산케이신문의 일본인 납치·유괴사건 보도에 대하여 “비열한 정치적 모략극”이라고 비난하였고 아울러 산케이신문을 ‘정치적 시녀’, ‘쓰레기 언론’ 등으로 극렬히 비난하였다.
- 7)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의 가족들은 ‘피해자가족연락회’를 결성한 뒤 1997년 3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에 신속한 진상규명과 함께 신병반환을 북한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해를 교환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 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⁸⁾. 이와 같은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1997년 4월 9일의 북한선적의 화물선 '지성 2호'의 각성제 밀수사건과 4월 11일의 산케이신문과 NHK TV의 노동 1호⁹⁾의 배치 보도로 한층 신중해졌다. 즉 북한의 인민무력부 공병국 제6국이 일본 관서지방의 폭력조직이 결탁하여 각성제 70kg (약 100억 엔)을 미야기현(宮崎縣)의 호소시마(細島)항으로 밀반입시키려다 발각됨에 따라 일본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었고, 또 1998년 가을에 배치작업이 중단되었던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 1호가 동해안에 재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함에 따라 더욱 신중해졌다.

요컨대, 북·일관계는 제1차원의 양자간 문제, 즉 ①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 의혹사건, ② 각성제 밀수사건, ③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의 동해안배치 의혹사건 등으로 인하여 일본이 대북한 정책의 전개에 신중을 기함에 따라 정체상태에 빠진 것이다.

다. 제3기 : 국교정상화의 환경정비를 위한 북·일의 접근

(1) 북·일간의 현안과 베이징(北京) '심의관급 회담'

황장엽 사건후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 의혹사건, 각

-
- 8) 이케다 외상은 대북한 식량지원 문제에 관해서 "우방국들과의 정보와 견해를 교환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 심각히 고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엔의 호소에 따른 대북한 식량 추가 지원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동참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9) 노동 1호는 일본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사정거리 1,3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산케이신문과 NHK TV는 그와같은 미사일이 최근 이동식발사대와 함께 3기가 재배치되었고 곧 추가로 7기가 배치된다고 보도하였다.

성제 밀수사건,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의 동해안배치 의혹사건 등으로 북·일관계가 정체상태에 빠지게 될 때에도 일본과 북한은 1996년 3월 이래 비공식 과장급 실무회담을 계속 가졌다. 그 결과 1997년 8월 21~22일 베이징에서 '심의관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에서는 제1차원 즉 북·일 양자간의 주요 현안인 ① 일본인 납치의혹사건, ② 대북 식량지원 문제, ③ 각성제 밀수의혹 사건, ④ 북송 일본인처 방일문제, ⑤ 국교수교 본회담 조기 개최 등을 다루었다. 그 결과 북한이 부정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의혹사건은 '계속 협의' 형태로 뒤로 미루어졌지만, 대북 식량지원 문제, 각성제 밀수의혹사건, 북송 일본인처 방일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타결 원칙이 마련되었고, 국교수교 본회담 조기 개최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2) '북송 일본인처의 방일 허용'과 '대북식량지원' 결정

(가) 북송 일본인처 제1진의 방일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1997년 9월 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일 적십자사 연락협의회」에서는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을 실현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일본 국적의 북송 일본인처는 1,831명 정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 1진 15명이 1997년 11월 8일 일본에 도착하였다.

북·일 양국 정부는 북송 일본인처 제1진의 방일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후속 제2진의 방일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1997년 12월에 북송 일본인처의 고향방문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2차 적십자 연락협의회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1998년

1월 27일~2월 2일까지 제2진의 방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일본의 대북식량지원 결정

북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짐에 따라 대북한 식량지원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일본정부는 앞서 언급한 1997년 8월의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개최, 동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일 적십자사 연락협의 회의 북송 일본인처 방일 합의 등을 계기로 대북한 식량지원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9월 중순부터 일본의 정부여당이 2,700만 달러의 대북식량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동년 10월 9일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2,700만 달러의 대북식량지원을 결정하였다. 즉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WFP에 2,700만 달러를 기부하고, WFP가 이 자금으로 일본 재고미 6만 7,000톤을 구입하여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3) 연립 3여당 대표단의 방북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환경정비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개최, 북송 일본인처의 고향방문 합의 등을 계기로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문제가 결정됨에 따라, 북한은 이를 경직된 북·일관계가 다소 개선되기 시작하는 조짐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즉 북한은 북·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민당을 통해 자민당측에 방북단 파견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1997년 10월 7일의 자민·사민·사키카게 3당 간사장회의에서는 방북단 파견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는데, '국교수교 교섭의 재개를 위한 환경정비차원'에서 연립 3당 합동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연립 3여당 간사장회의에서는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 북송 일본인처 방일의 추진, 2,700만 달러의 대북식량지원 결정 등으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방북대표단 파견을 결정한 것이다.

자민당의 모리(森喜朗) 총무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북대표단은 1997년 11월 11일 북한을 방문하고 14일 귀국했는데, 일본으로 출발하기 직전 14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모리 총단장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동년 11월 19일 오쿠라 가즈오(小倉和夫) 주일대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태도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북·일 수교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 1998년 3월 28일에서 31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자민당 방북단은 ‘요도 호 납치범 일본송환’¹⁰⁾,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현안에 관하여 논의한 뒤, 북한측에 ‘평양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4월 1일 도쿄(東京)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북식량지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¹¹⁾

이처럼 1997년 중후반부터 1998년 3~4월까지의 북·일관계는 다소 진전된 듯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북한이 북·일수교협상의 재개에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 일본의 하시모토 정권이 한국·중국·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신뢰회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라시아 외교’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므로, 북·일간에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조만간에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다. 요컨대 북한측이 ‘일본인 납치의혹’에 대해서 “일반 행방불명자로서 조사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북·일간의 남은 주요한 문제는 이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문제만 남게 된 것이다.

10) 요도호 납치사건은 1970년 일본 적군파(赤軍派) 9명이 JAL기 요도호를 납치한 뒤, 여의도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망명한 사건을 말함.

11) 「AERA」, 1999. 2. 15.

라. 제4기: ‘갈등속의 접촉’, ‘접촉속의 갈등’ 상태의 북·일관계

북·일 수교협상은 모리 총단장의 평양 기자회견이나 오쿠라 주일대사의 언급처럼 조속히 재개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1998년 5~6월경에 들어오면서 북·일관계는 제1차원의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해명과 ‘북송 일본인처 제3진의 방일’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면서 또 다시 냉각상태로 빠지기 시작하였다. 즉 1998년 6월 북한 적십자사가 담화를 통하여 납치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일본정부에 통보함에 따라, 일본의 대북한 불신·반목은 한층 깊어지게 되었고, 아울러 북송 일본인처 제3진의 방일이 중단하게 되었다.

게다가 1998년 8월의 북한의 ‘광명성 1호’ 즉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을 계기로 하여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게 되었다.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을 계기로 일본 국내에서 대북한 강경론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식량지원 중단, 직항 전세기의 운항 중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협력의 일시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북한당국 또한 일체의 대화창구를 폐쇄하였다. 즉 북·일관계는 거의 단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극히 냉각된 관계는 1999년 3월의 북한공작선 영해침투사건, 7~8월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재발사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북한은 일본에 대하여 ‘접근과 미사일 협박’의 전략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고,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한·미·일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대화과 억지’ 병용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① 대일본 관계개선을 위한 접근을 추구하고 ‘대화 채널’을 확보하기 노력하면서, 동시에 ② ‘미사일 협박전략’을 활용하고 있고, 일본은 ① 접근과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정책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② 군사적 역할 증대 및 군사력의 정비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한

강경조치를 취하면서 ③ 북한 미사일문제와 관련하여 ‘대북한 압박의 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북·일관계는 ‘갈등속의 접촉’, ‘접촉속의 반목’을 되풀이 하고 있는 긴장상태에 있으며, 아울러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여부에 따라 갈등이 한층 증폭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3. 북한의 대일본 전략 및 일본의 대북한 전략

가. 북한의 대일본 전략 : ‘접근과 협박’전략

제5차원의 글로벌 수준의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동과 더불어 4차원의 동북아 국제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제2차원의 남북관계도 진전됨에 따라, 북한은 대일본관계 진전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즉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한국이 북방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한·소관계의 국교정상화 및 한·중관계의 진전이 이룩나자,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적 침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일본접근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앞에서 언급한 바 같이 북한의 노동당과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 사이에는 ‘3당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제1차에서 제8차까지의 수교회담을 하게 되었다.

제1차에서 제8차까지의 수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일은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면서 대립하였지만, 북한은 일본측의 요구에 다소 양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실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북한이 대일 관계개선 및 정상화를 추구하는 전략적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일본과의 관계진전 및 국교정상화 등을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북한은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고, 아울러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대 한국 교섭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미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국교정상화를 경제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획득할 수 있고,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진출이나 자본 및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한 경제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8차 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결렬되고, 북·일관계가 양자간 차원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제3차원의 북·미관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북한은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북·일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 북한으로서는 대외적으로 미·일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확대해 갈수록 대내적으로 통제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체제적 차원의 부담을 고려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대일본전략은 정치적 차원의 국교정상화보다는 일본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북·미관계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제약된 틀 속에서 식량지원 등 경제적 실리를 획득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전개되게 되었다. 즉 북송 일본인치의 고향 방문, 연립여당의 북한 방문 등을 경제적 지원과 연계시키면서 국교정상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가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개선을 위한 대일본접근과 더불어 북한은 대일본

관계에서 ‘미사일 협박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바 같이 작년 8월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을 야기하여 일본을 매우 날카롭게 자극하고 대일본 관계를 거의 단절상태로까지 악화시켰는데, 현재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은 정권 창건일인 9·9절 이전에 사정거리 약 4,000~6,000km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일본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¹²⁾.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예정대로 단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둬드는 우려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카드’의 전략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은 ① 체제강화를 위해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② 제3국에 대한 무기판매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이외에, ③ 향후 미·일과의 협상에서 경제지원 등의 수확을 최대한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일종의 ‘벼랑끝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북한은 ①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그 이전까지는 ‘미사일 시험발사’ 그 자체를 미·일과의 협상에서 이용하고¹³⁾, ②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그 이후에는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 능력’을 전략적 교섭력(bargaining chip)으로 활용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대일본 전략에서 ① ‘접근과 대화 전략’과 ② ‘협박

12) 1998년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던 함경남도 화대군 무수단리 소재 미사일기지에서는 20m 높이의 발사대를 60m 높이로 올렸다고 하는데, 이 발사대의 높이를 분석하면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약 6,000km로 추정된다고 한다. 북한은 이와 같은 미사일의 탄두에 인공위성체를 장착하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주변국의 비판과 경제제재를 교묘히 피해나가려는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통일정보신문』, 1999. 7. 21.

13) 1999년 8월 3일부터 9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측에게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포기할 경우, 그 대가로 대북한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아일보』, 1999. 8. 23.

전략'을 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대일본 '접근 및 대화와 협박전략'에 따라 1999년 8월 11일 중앙통신을 통하여 일본이 과거청산을 통해 관계개선을 희망해 올 경우 기꺼이 응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표 1>과 같은 내용의 '대일본 3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¹⁴⁾.

<표 1> 북한의 대일본 3원칙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압살정책을 포기해야 함.2. 일본은 북한에 범한 과거의 죄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철저한 보상을 해야 함.3. 일본이 끝까지 힘의 대결로 나온다면 북한도 상응하는 대응책을 선택할 것임. |
|--|

나. 일본의 대북한 전략: '대화와 억제'전략

북·일관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한국의 북방정책이 전향적으로 전개하게 되자, 일본은 전후처리외교 차원에서 북·일수교를 지향한 대북한 접근 및 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다. 정치권의 주도로 시작된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면서 외무성을 통한 실무수준에서 추진되었다.

일본의 대북한 접근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의 전략적 의도 및 이익

14) 북한이 대외관계에 관한 정부성명을 발표한 것은 1993년 NPT탈퇴 발표 성명 이래 처음인데, 이는 일본의 대북한 강경정책에 대응하려는 '대화 및 협박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일 국교정상화는 일본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전후처리 및 결산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일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20세기의 골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를 ‘대외적 차원에서의 전후결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둘째, 북·일관계 및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북한지역에 아시아대륙 및 시베리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로 귀결될 수 있고, 따라서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위한 국가전략에도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제1차원의 북·일 양자간의 갈등보다 제3차원의 북·미 갈등 때문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즉 일본의 대북한 전략은 북·미관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율성의 한계로 인하여 한·미·일 공조체제의 틀 속에서 현상유지 수준에서 전개되게 되었다.

그리고 작년 8월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을 계기로 하여 현상유지 수준의 대북한 정책은 또다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일본열도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아래 놓이게 되고, 일본내 대북한 위협론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대북한 위협론의 확산에 대한 대응, 신뢰할 수 있는 대북한 채널 확보, 미·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북한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일본은 제1차원의 일본내 대북한 위협론의 확산, 제2차원의 한국정부의 대북한 포용정책의 전향적인 추진, 제3차원의 미·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화과 억지’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1) 접근과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정책

앞에서 언급한 같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사건으로 일본내에서 대북한 강경론이 확산되고, 북·일관계는 거의 단절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북·일관계가 재차 접근과 대화의 관계로 전환되면서 ‘수면 아래’ 또는 ‘수면 위’의 접촉을 가지게 된 것은 1998년 12월 경부터였다. 즉 1998년 12월에 뉴욕에서 일본 외무성 동북아 과장이 북한의 이근 UN대표부 차석대사와 접촉을 가졌고, 이어 1999년 1월 경 자민당의 나카야마 마사아키(中山正輝) 중의원(衆議院) 예산위원장이 북한의 송호경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접촉을 가졌다. 그와같은 접근과 더불어 오부치(小淵惠三) 총리는 1999년 1월 19일의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등이 제거될 경우 대화와 교류를 통한 관계개선의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베이징 주재 북·일 양국 대사관도 접촉을 가졌다. 나아가 동년 4월 싱가포르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고례시게(阿南惟茂) 아시아국장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고위 당국자간에 수교회담의 재개 등 현안논의를 위한 비밀접촉이 이루어졌다.¹⁵⁾

또 오부치 총리는 동년 5월 3일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일 3국이 대화와 억지 전략을 병행하여 공동대응을 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아울러 회담후 가진 회견에서는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개설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¹⁶⁾ 이어 오부치 총리는 동년 5월 14일 총리관저에서 한국의 신문·통신·방송사 정치부장들과 가진 모임에서 “앞으로 북·일관계가 정상화되어 경제협력문제가 나오면 적극 협력하는 방

15) 「동아일보」, 1999. 5. 13.

16) 「동아일보」, 1999. 5. 5.

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언급했다¹⁷⁾.

이와 같은 일본의 접근과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정책은 ① ‘신뢰할 수 있는 대북한 대화채널’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② 미·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③ 한국정부의 대북한 포용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¹⁸⁾

그런데 현재 일본의 접근과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정책은 ‘일본인 납치문제’, ‘방북단의 지연문제’, ‘대포동 2호 시험발사 문제’ 등으로 다소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2) 대북한 억지력 강화정책

1998년 8월 초순 일본의 코우치현(高知縣) 쿠보카와 앞바다에서 또 다시 북한산 각성제의 대량 밀수사건(약 300kg, 180억 엔)이 적발됨에 따라 일본 공안당국의 북한에 대한 경계의식이 강화되었는데, 동년 8월 31일의 ‘광명성 1호’ 발사사건과 더불어 일본내 대북한 잠재적 위협인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폭하게 되었다. 즉 일본내 대북한 위협론의 확산과 더불어 북·일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 직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9월 7일 한국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사태”라

17) 「한겨레신문」, 1999. 5. 15.

18) 1999년 2월 11일 한국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북한 지하핵의혹시설과 미사일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미국과 일본이 각종 대북한 제재를 해제하고 수교 등 완전한 형태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미·일에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고 강조하였고, 노나카 관방장관은 동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설사 인공위성을 쏘았다고 해도 이는 추진력을 갖고 있는 물체(로켓)에 위성이 달려 있었는가, 탄두가 달려 있었는가의 차이일 뿐”이라며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일본 지도부의 대북한 인식은 1991년 1월 3일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 방위청장관으로 하여금 “심각한 북한의 위협이 있을 경우, 일본은 북한의 군사기지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국민들의 대북한 및 조총련에 대한 인식도 매우 악화되기 시작했는데¹⁹⁾, 일본정부는 일본내의 대북한 위협론의 확산을 명분으로 군사적 강화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 대북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아울러 ‘대북한 압박외교’를 전개하게 되었다.

최근의 일본군사력의 질적 강화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본은 경항공모함으로 개조가 가능한 수송함 ‘오스미’(8,900톤급), 최대의 잠수함 ‘오야시오’(2750톤), 조기경보기(E2C) 13대, F4전폭기 110기, F15전폭기 194기, 최고의 전함 이지스 구축함 4척, 조기경계관제기 AWACS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996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 완료되는 2000년까지는 최신예 지원전투기 F2 47기를 보유하게 되고, 아울러 가까운 시일내에 공중급유기, 정밀순항미사일도 보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작년 8월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에 영향을

19)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을 계기로 일본내 대북한 여론이 악화되자 조총련계 상공인들은 대북한 투자에 대해 상당한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조총련계 교포들의 대북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배정호, 「조총련계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또 1999년 5월 27일 후지TV의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 일본국민들의 85%가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아 ‘독자적인 첩보위성의 개발’⁶⁰⁾ 및 미국과의 전역미사일 방위(TMD)체제의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⁶¹⁾ 또 금년 3월의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투사건’을 계기로 자위대 함정 및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장비를 강화하는 방안의 구체화와 더불어 소형 고속정을 정선시킬 수 있는 신형 미사일정 4척을 2001년까지 도입하는 등 해상자위대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군사력의 질적 강화는 ‘21세기의 군사·정치대국’을 지향하여 확대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대북한 역지력의 강화로 직결되는 것이다. ‘21세기의 군사·정치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의 군비증강이 대북한 위협론의 확산을 명분으로 삼아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국내의 대북한 위협론의 확산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위대의 군사·정치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유사법제의 정비는 1981년에 입법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정체상태에 있다가 1996년 4월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재차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일본의 자민·자유당 연립정부에 의해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이 성립되었다. 즉 자민·자유당 연립정부는 야당 공명당(公明黨)과의 정책연대 아래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60)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4~5년 내에 군사시설의 정찰이 가능한 첩보 위성 및 관련기술을 도입하여 방공체제(防空體制)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이를 일본정부에 권고하였다. 따라서 1998년 11월 일본정부는 이를 토대로 각료회의에서 2002년까지 첩보위성 4기를 개발할 것을 결정하였다.

61) 미국 국방부 케네스 베이컨 대변인은 1999년 8월 10일 “일본은 이미 미국과 탄도미사일 방위체제의 공동연구를 시작했다”고 언급하면서, 동년 8월말 미국과 일본은 TMD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및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투사건을 계기로 일본내 대북한 위협 인식이 상당히 제고되고 있는 분위기를 활용하여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 즉 <표 2>와 같은 내용의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을 4월 27일에 중의원에서 통과시켰고, 5월 24일에는 참의원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급변사태시에 주일미군의 병참지원 등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40개의 항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미·일의 전략적 역할분담에 의한 대북한 억지능력의 강화이기도 하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북한 공작선의 영해침투 사건으로 드러난 영해·영토 방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에 '영역경비업무'를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유사법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한반도 급변사태시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⁶²⁾.

이와 같은 법적 정비 이외에 일본 정부는 제도적 정비로서 이미 1997년 1월 20일에 종합정보기관인 '정보본부'를 설립하였고, 1998년 12월 28일에는 '방위정보회의'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1999년 1월 11일에는 '내각정보회의'를 발족시켰다. 통합막료회의 내에 설치된 정보본부(직원수 약 1,600명)는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방위청의 내국과 통합막료회의, 육·해·공 자위대의 정보부문 등 기존의 정보조직을 하나로 통합시킨 기관이고,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발족한 방위청의 방위정보회의는 위기발생시 정보본부에서 수집·분석한 동북아 전략정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총리에게 자위대 출동여부를 신

62) 원래 선박검사조항은 「주변사태법」의 원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유엔안보리 결의 포함'문제와 관련하여 자민·공명당과 자유당간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원안에서 삭제되었다.

속하게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내각정보회의는 북한정세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데 역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2>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의 주요 내용

법안명	법 안 주 요 내 용
주 변 사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치시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이 될 우려가 있는 등 주변지역에서 일본의 평화·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周邊事態)에 대응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절차 등을 규정해 미·일 안보조약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1조) ○총리는 주변사태시 후방지역지원, 수색·구조 활동에 대해 종류·내역·범위 등을 명시하는 기본계획을 마련(4조)하고 방위청장관은 동 계획에 의거 대응조치 실시(6·7·8조) ○총리는 자위대가 실시하는 후방지역지원, 수색·구조활동을 국회에 사전 승인받고 긴급시 사후승인 인정(5조) ○관계 행정기관장은 법령 및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공공단체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구(9조) ○주변사태 종료후 정부는 대응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10조)
자위대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시 외국거주 자국민 수송을 위해 정부전용기만 사용할 수 있는 규정(100조 8항)을 자위대 선박 및 선박에 탑재된 헬기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 ○자위대 수송활동시 자위대원 및 자국민 생명·신체보호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무기사용이 가능하다는 조항 신설
미·일 ACSA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시로 한정되었던 자위대와 미군간 물품·서비스 상호제공 의무를 주변 사태시까지 확대 적용 ○무기·탄약의 공급은 제외

(3) 북한의 미사일문제와 일본의 대응

앞에서 언급한 바 같이, 작년 8월 미사일 운반체계를 시험발사하여 일본을 크게 자극하였던 북한은 금년에 또다시 중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시험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북한정권의 창건일인 9·9절 이전에 사정거리 약 4,000~6,000km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것이다²³⁾.

북한의 이와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일본은 한·미·일 3국 가운데 가장 강경한 대응책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열도 전역이 사정권 아래 놓여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1999년 6월 6일 베이징 비공식 외무실무자 접촉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북·일관계개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는데, 대처방안으로서 ① 군사적 차원에서는 전투기에 의한 미사일기지의 폭격 방안, 첩보위성 및 TMD체제에 의한 대응 등을 강구하고 있고, ②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유엔 해양법 조약' 및 '시카고 조약'을 근거로 하여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③ 경제적 차원에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10억 달러의 지원자금 동결, 조총련의 대북송금 중단, 식량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²⁴⁾. 그리고,

23) 1998년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던 함경남도 화대군 무수단리 소재 미사일기지에서 20m 높이의 발사대를 33m 또는 60m수준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이 발사대의 높이를 분석하면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약 4,000~6,000km로 추정된다고 한다. 북한은 이와같은 미사일의 탄두에 인공위성체를 장착하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주변국의 비난과 경제제재를 교묘히 피해 나가려는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통일정보신문」, 1999. 7. 21; 「産經新聞」, 1999. 8. 3.

24) 아무런 사전통고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① 해역사용에 대해 “연안국의 권리에 대한 타당한 고려를 기울인다”고 규정된 ‘유엔 해양법 조약’ 및 ② 항공기의 안전항공을 정한 ‘시카고 조약’에 저촉되는 것이다. 따라서

④ 외교적 차원에서는 한·미·일 공조대응의 공고화를 중심으로 ‘대북 압박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즉 일본은 지난 6월 20일의 G8(선진 7개국 + 러시아)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미사일 확산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하였고, 7월 9일의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가 일본의 안전은 물론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7월 26일 개최되는 아세안 지역포럼(ARF)의 의장성명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표명되도록 하는 외교공작을 전개하였다²⁵⁾. 그리고 7월 28일 코언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는 북한의 미사일의 발사저지를 위해 한·미·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²⁶⁾.

이와 같은 일본의 사전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포동 2호’의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일본은 이를 빌미로 한층 강력한 군사력의 질적 강화 및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구할 것이다²⁷⁾.

일본은 북한이 ‘유엔 해양법조약’ 및 ‘시카고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참가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제재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經濟新聞』, 1999. 7. 12.

25) 1999년 7월 26일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무장관은 탕자쉬엔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ARF 의장성명에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 결과 1998년 8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이 한반도와 지역안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이 ARF 의장성명을 통하여 표명되었다.

26) 『朝日新聞』, 1999. 7. 29.

27) 일본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재발사에 대비하여 미사일의 항적을 포착할 수 있도록 최선에 이시스함 3척을 동해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일본 방위청은 미사일이 일본영토에 떨어지면 ‘재해파견’ 규정을 적용해 자위대를 파견하고, 아울러 연속착탄으로 무력공격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방위출동을 명령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동아일보』, 1999. 8. 9.

4. 결론: 북·일관계의 제약요인과 수교전망

제5차원의 글로벌 수준의 국제환경의 영향, 즉 북·일관계의 진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탈냉전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북·일 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지향하여 전향적인 접근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일관계는 ① 제3차원의 미국의 세계핵전략과 북한 핵문제, ② 제2차원의 북·일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대한 한국의 견제 및 제동 등의 영향으로 자신들의 의도대로 진전되지 못했고, 게다가 ③ 제1차원의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및 북한 핵·미사일문제로 인하여 정체상태에 빠지거나 긴장상태로 악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대일본 '접근과 협박' 전략을 전개하고 있고, 일본 또한 제2차원 즉 한국의 전향적인 대북한 포용정책 등을 고려하여 대북한 강·온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대일본 접근과 더불어 '미사일 협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일본은 '억지를 바탕으로 한 대화' 전략의 추진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력의 질적 증강에 의한 억지전략의 추진과 더불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²⁸⁾.

현재의 북·일관계는 미·일안전보장체제 및 한·미·일 공조체제의 강화에 따라 대북한 억지력이 증강되는 상황속에서 '갈등속의 접촉',

28) 1999년 3월 북한의 금강리 지하핵의혹시설과 관련하여 미·북간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도,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 한·미와 긴밀히 협조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와 더불어 직접대화를 위한 노력을 진력할 것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미·북 미사일 협상이 불투명한 점을 제기하면서 대북한 관계개선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제언하였다.

‘반목속의 접촉’을 벌이고 있다. 북·일 양국이 그와 같은 접근·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① 북한으로서는 핵·미사일문제로 인하여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어 지극히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때, 미국에 전략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재자인 일본의 존재가 필요하며, ② 일본으로서는 미·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대비, 일본내 대북한 위협론의 확산에 대한 대응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현상유지수준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으로서는 북한 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역지력을 증강시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접근과 대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의 북·일관계는 궁극적으로는 국교정상화를 지향하여 전개될 것이지만, 단·중기적으로는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채널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촉을 벌일 것이다. 즉 단·중기적 차원의 북·일접근이 국교정상화를 이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북·일관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자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미·북관계, 남북한관계, 동북아 지역의 전략환경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북·일관계 진전의 제약요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차원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제1차원에서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일본인 납치문제는 일본내의 대북한 여론을 매우 악화시켰고⁶⁹⁾, 북한 핵·미사일문제는 일본내에 대북한 위협론이 확산되

69) 일본내 피해자 가족 및 인권단체들은 1999년 3월 3일 오부치 총리를 방문하여 125만 명의 국민 가두서명서를 전달하면서, 국경 최우선과제로서 납치의혹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동년 5월 2일 동경에서는 관계자 1,900여 명이 참석한 ‘북한 납치일본인 구출 전국대회’가 최초로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서는 일본정부의 조기해결 노력을 촉구하였고, 유엔에 인권구제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피해가족 및 관련 인권단체들은 지속적인 서명운동, 전국적인 대회 개최, 유엔 인권위원회 제기 추진 등

도록 하였다.

둘째, 제2차원에서는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이 좌절되고 남북한관계가 긴장상태로 악화될 경우, 북·일관계의 진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제3차원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문제로 인한 미·북간의 심각한 갈등이 야기될 경우, 북·일관계는 상당히 냉각되는 상태로 악화될 것이다. 즉 미국은 글로벌 파워이고, 북한의 핵문제는 미·북 양자간 문제 이상의 글로벌 이슈(issue)이므로,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체제내에서 전략적 역할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제4차원의 동북아지역의 국제환경과 관련해서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및 관련 3개 법안의 통과로 인하여 미·일과 중국간에 군사·정치적 갈등이 조성되고 있고 중국의 대북한 지원이 증대되고 있는데, 동북아지역에서 '미·일 대 중국'의 대립구도와 더불어 '한·미·일 대 중·북'의 대립구도가 조성되면 북·일관계 역시 그와 같은 대립구도내에서 갈등·대립의 관계로 악화될 것이다⁷⁰⁾.

그러므로 북·일관계는, 오부치 총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미·북관계가 질적으로 진전되고 일본 국내의 대북한 여론이 다소 호전될 때, 국교정상화를 향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즉 일본은 다차원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 속도를 조절하면서,

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의혹 해결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70)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및 관련 3개 법안의 통과에 대해 중국은 매우 반발하였는데, 다른 한편에서 중국은 최근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또 1999년 6월 4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회견한 자리에서 "중국은 조선(북한)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서방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조선일보」, 1999. 6. 5.

한·미·일 공조체제의 틀 내에서 대북한 접근 및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국내여론, 미·북관계, 남북관계, 동북아 전략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때로는 '수면 위' 때로는 '수면 아래'의 접촉을 계속해서 추진해 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후결산인 국교정상화를 이룩하고자 할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러시아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 머리말

미·소간 냉전이 종식된지 거의 10여 년이 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아직도 남북분단과 침예한 정치·군사적 대립이라는 냉전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는 달리 역내 국가간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동북아 외교·안보환경은 역내 4강간의 협력분위기 조성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만약 이들 국가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거나 또는 이들의 남·북한에 대한 정책이 차이를 보일 때 냉전구조 해체는 물론 남북한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작년 2월말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한편으로는 경제국난을 극복하면서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경제·통상 외교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공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안보·통일외교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하여 김대중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정경분리의 포용정책을, 그리고 주변 4강에 대해서는 순방 정상외교를 추진하였다. 김대중 대통

령은 작년 6, 7, 11월에 미국·일본·중국을, 그리고 금년 5월, 7월에는 러시아·미국을 각각 방문,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함과 동시에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역내 관련국들간 다자안보대화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및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다자안보 대화 등의 성공여부는 남북한관계, 남북한과 주변 4강간의 관계, 그리고 주변 4강들간의 관계 등 복잡한 상호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임이 틀림없다. 실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조적 안보 연계성'(geo-strategic, structural security linkage)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 통일달성 여부 및 그 방법은 그것이 일차적으로 남북한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의 협조와 지지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동북아 4강은 이념보다는 실리에 입각한 양자관계를 재정립하여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은 러시아·중국과 각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후 정상급 회담을 정례화 하였으며, 러시아도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그리고 일본과는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우호·협력관계를 확대시켜 오고 있다. 일본도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를 추구하고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라시안 외교를 적극 추진, 1997년 여름부터 대러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중국 역시 경제개혁의 성공과 군사강국의 실현을 위한 탈이념적 외교정책을 추진, 러시아·미국 등과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달성하였고, 일본과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북아정세는 미·일간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미·일의 TMD 공동개발

추진, 미국 주도의 NATO 유고공습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반발 등은 주변 4강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동북아정세는 물론 한반도 통일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또는 인공위성) 재발사 준비에 대한 미·일의 강력한 반발 및 중·러의 소극적 대응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 4강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는 또한 냉전구조의 해체 등 한반도문제가 남북한의 대4국관계에 의해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미·일·중·러 4국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에 의하여 결정될 매우 복잡한 사안임을 말해 주고 있다.

물론 김대중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을 북한이 수용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고 동북아 다자안보대화가 실현될 경우, 주변 4국의 남북한에 대한 교차승인의 조기 완료는 물론 남북한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냉전구조의 해체 등과 같은 우리 정부의 대북, 대4강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상황, 즉 남북한관계의 악화 또는 현상유지의 지속, 주변 4강간 갈등과 대립 지속에 따른 동북아정세의 유동성 및 불확실성 증대, 북한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역내 국가간 대립 심화 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결국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전개를 막기 위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대4강 외교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지난 몇 년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소외되자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금치 못하였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력의 부재는 한편으로는 체제전환과정에서 노정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정치 우선주의와 통일되고 확정된 외교정책의 부재에 기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탈냉전후 대외적 압력행사 도구로서의

군사력의 중요성 저하와 경제력의 상대적 중요성 증대에 기인한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 외에도 한반도문제 해결노력에 있어서 한국의 당사자 해결원칙 고수 및 북한의 대미일변도적 외교 편향과 같은 간접적 원인이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전통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의 강화 및 한반도문제에 대한 개입정책을 모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미·일과의 관계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문제에 관한 한·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은 아직까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코소보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과정은 핵강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국제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러시아는 오는 12월 총선 및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대선을 계기로 체제전환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크게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과정에서 러시아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러시아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정세 인식 및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남·북한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전개, 발전되어 왔는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과정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무엇인지,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이 기대되며, 이를 순기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은 어떠한 대러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목표와 전개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목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목표는 넓게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외교·안보·경제정책의 목표, 그리고 좁게는 동북아지역을 포함한 아·태지역에 대한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목표 속에서 결정, 실행되어 오고 있다.¹⁾ 따라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넓게는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아·태지역에 대한 정책 목표, 그리고 좁게는 대한반도 정책목표를 살펴보아야 한다.

러시아는 신생국가로서 출범한 직후에는 ‘경제이익’을 우선시하는 친서방주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1992년 말부터 서방 경제지원의 미미, 경제개혁의 실패에 따른 민심이반과 보수·민족주의 세력의 부상, 옛 소련지역에서의 민족분쟁의 심화, NATO의 확대 등 때문에 ‘강대국 지위회복’과 ‘근외정책’(구소연방 14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중시하면서 ‘동·서양에 대한 균형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²⁾

엘친정부의 아·태지역에 대한 관심도 이상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러시아의 외교정책방향이 점차 보수·민족주의화됨에 따라서 점차 증

1) 실제로 러시아의 범세계적인 외교·안보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주요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연방 외교정책 개념의 주요 교의’(1993. 4월 채택), ‘러시아연방의 군사독트린의 주요 교의’(1993. 11월 채택), ‘국가안보개념’(1997. 12월 채택), 그리고 수차례 발표된 엘친 ‘대통령의 연두교서’ 등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신생 러시아 출범후 러시아 외교정책 방향의 변화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고재남, “轉換期 러시아 外交政策方向 變化分析,” 『러시아 연구』 (1994, 창간호), pp. 74-97; 강봉구, “러시아 대외정책 기조변화와 전망: 1992~1995,” 『國防論叢』; Margot Light, “Foreign Policy Thinking” in Neil Malcolm, Alex Pravda, Roy Allison, Margot Light, *Internal Factors in Russian Foreign Policy* (Oxford: Clarendon Press, 1996), chap. 3.

대되어 왔다. 엘친 대통령은 1995년 7월초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 1회 아·태지역 공관장회의에서 러시아가 유라시아국가임을 표방하면서 CIS지역 및 아·태지역에 대한 정책비중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외무부내 아태지역 담당부서를 2개국에서 4개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아·태지역 중시정책은 1996년 1월 프리마코프(Yevgeny Primakov)가 코지레프의 후임 외무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더욱 강화되었다. 즉 프리마코프는 그 동안 서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던 동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갔다.

물론 러시아의 아·태지역 중시정책의 대두배경을 이상과 같은 요인만으로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 영토적으로 보아도 러시아의 영토 2/3가 아시아지역에 위치하며, 동남부지역에 중국·일본·북한·미국 등 6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태평양 해양세력의 일원이었다. 따라서 러시아인들은 아·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정치적 변화가 자국의 안보·경제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³⁾ 즉 러시아는 21세기에 동북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때를 대비하고 또한 국내경제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시베리아·극동지역이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러시아 시베리아지역 및 극동지역의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러시아는 장래에 아시아의 현실을 반영한 그리고 역내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집단안보체제가 확립되기를 바라고 있다.

3) Yevgeniy V. Afanasyev, "Russia's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Asia and Pacific Region" (January 1996); & Gueorgui F. Kunaze, "Russia's Foreign Policy in Evolving World and Prospects of Russia-Korea Relationship" (July 8, 1994). 상기 논문들은 외교안보연구원과 한국외교협회에서 각각 발표된 논문들임.

실제 열린 대통령은 1992년 11월 22일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서유럽 및 미국 중심노선으로부터 아시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번 한국방문은 이의 첫 번째 조치이다”⁴⁾고 선언하였다. 그는 아시아국가로 향후 지역안보에 책임을 공유하기 위한 태세가 되어 있다면서 역내국가들간 신뢰구축에 공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당시 열린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안보를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였다.⁵⁾ 그것은, 첫째 당장 아태지역 그리고 소지역의 안보에 대한 다자협상 메커니즘의 즉시 도입, 둘째 아태지역, 특히 우선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사적 위기심화를 막기 위한 ‘위기해결체제’(crisis settlement system)의 창설, 셋째 아태지역 국가들의 국방비, 군사독트린, 군 배치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역내 ‘전략연구센터’의 창설 등이다.

여기서 러시아의 아태지역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의 관심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주요 국가들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탈이데올로기적 동반자관계의 확립, 둘째, 그 동안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축적된 잠재력을 러시아의 국익증대를 위하여 최대한 활용, 셋째, 역내 경제·정치 기구에 대한 적극적 참여, 넷째,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및 아태지역 경제기구로의 통합 추진, 다섯째,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을 통한 지역안정과 평화의 달성, 여섯째, 역내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발언권 유지 등이다.⁶⁾

4) *The Korea Herald*, November 23, 1992.

5) Alexander Z. Zhebi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Russia," 『地域研究論叢』, 제6집 (1994), p. 159.

6) Igor Ivanov,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Nezavisimaja Gazeta* (February 23, 1999); *Ibid.*, p. 164 등 참조.

상기의 아태지역에 대한 외교정책의 목표중 동북아지역에 국한시켜 볼 경우,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의 현상유지와 이를 위한 양자 또는 다자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지역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러시아는 과거 소련이 이 지역에서 누렸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내 국가들과 양자 또는 다자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북아질서를 모색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첫째,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영향력 확보하는 것을 견제하고, 둘째, 중국과 일본의 역내 패권경쟁을 저지시키고, 셋째,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넷째, 역내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극동·시베리아 지역개발은 물론 러시아의 경제를 아태지역 경제권으로 편입시킨다는 외교정책목표를 추진해 오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몇 년 동안 한반도 안정과 기득권의 유지라는 외교정책의 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남북한 등거리정책추구 및 미·일·중 등 주변 3국과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역내에서 러시아의 국익을 최대화한다는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즉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관심은 첫째, 비핵지화의 유지, 둘째, 군사·정치적 대결해소를 통한 평화와 안정유지, 셋째,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간 건설적인 대화지시, 넷째,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확립, 다섯째, 한반도 주변 3국과의 세력균형유지 등이다.⁷⁾

7) Afanasyev, *op. cit.*; Gueorgui F. Kunaze, “北露條約의 폐기에 따른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코리아 포럼」(1995, 12), pp. 5~8; Andrei Kortunov, “Rus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Peninsula &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organized by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November 26~27, 1996. Seoul. Korea.

나.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의 전개

(1) 남한 중시정책과 그 전개

러시아의 대남북한관계는 남북한간 이데올로기적 대립 및 러시아의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에 기인하여 1990년 9월 30일 ‘한·소수교’를 시점으로 ‘영화 게임’(zero-sum game)에서 ‘준 영화 게임’(quazi-zero-sum game)으로 변화, 발전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균형정책을 강화시킴에 따라서 3국관계는 점차 ‘비 영화 게임’(non-zero-sum game)로 변화, 발전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한국 중시정책은 좁게는 동북아시아, 넓게는 아태지역에서 추구하는 경제·안보 이익이 깊은 영향을 미쳤지만 한반도 또는 남북한 각국에 대한 별도 인식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대한국정책, 더 나아가 한반도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시아의 대한국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는 한국이 현재 동북아시아 및 아태지역에서 경제성장 및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며, 장차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할 한국은 유럽 또는 아시아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적 잠재력이 큰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경우 동북아시아의 세력구조는 4강체제가 아니라 5강체제로 발전할 것이며, 한·러 양국의 동반자적 관계는 국제사회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역내 국가간 이익균형 및 세력균형의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개선 및 확대를 러시아의 아태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한국과의 경제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통일한국과의 협력은 경제·정치 등의 분야에서는 물론 장차 구체화될 중화경제권 또는 일본경제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한·러 양국이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보완성과 지리적 인접성 등을 잘 활용할 경우, 양국경제의 발전은 물론 러시아의 아태지역 경제로의 편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인접 및 전통적인 경제협력관계, 그리고 산업구조 및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이용하여 양자적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양자관계를 한국이 참여하는 다자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따른 체제불안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양국간의 직접적인 경제협력은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자원과 땅을 결합시킨 형태로 '삼각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실현시킬 경우 참여당사국들의 경제 이익증대는 물론 남북통일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비핵지대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국제공조체제에 남·북한은 물론 미국·일본·중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 안보협력 또는 대화체제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넷째, 러시아는 또한 한국의 사회·경제적 근대화 경험은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및 민주화에 많은 귀감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자국이 체제전환을 심화시켜 나감에 따라서 양국간 유사성이 증대되고 제반 분야에 있어서 호혜적 협력의 폭도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대한 인식은 한·러관계를 급속히 개선시키면서 양국간 거의 1세기에 가까운 외교적 단절을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여기서 한·러관계의 전개과정을 대략 4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기는 1988년 9월부터 1991년 12월말까지로, 이 기간 동안 한·러 양국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외교적 초기단계를 형성하였다. 이 시기에 양국간 관계정상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소련의 서울올림픽 참가, 양국간 역사적인 외교관계의 재수립,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간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하스블라토프 최고회의 의장 등 양국 고위인사의 상호 방문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은 1991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 소련의 경제개혁과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30억 달러에 달하는 경협차관 제공을 약속하였고, 이중 14억 7,400달러에 달하는 현금 및 소비재차관을 1991년 11월까지 제공하였다. 이 시기에 양국간 학술 및 문화·예술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에서 ‘소련바람’이 일어났다. 또한 양국간 기본 정치·외교 관계를 규정짓는 기본조약의 필요성이 수교후 제기되었고, 1991년 4월 제주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본조약 준비작업이 구체화되었다

제2기는 1992년 1월부터 1994년 5월말까지로, 이 기간 동안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양국은 1992년 11월 열린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전문 14조로 이루어진 「한·러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한·러 군사교류에 관한 의정서」를 교환, 양국관계를 정치·외교 관계의 설정이라는 초기단계에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94년 6월초 김영삼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공동선언이 채택될 때까지 한·러관계는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이는 수교초기 양국정부가 상호관계에서 추구하는 국익이 일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국정부의 전환기적 국내정치상황 때문이었

다. 즉 한국은 대소·러관계에서 정치·안보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 반면, 소련·러시아는 대한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였다. 또한 양국관계가 점차 정상화되어감에 따라서 KAL기 격추사건의 배상문제, 대사관 부지교환 또는 배상문제, 그리고 이미 집행된 경협차관의 상환 및 집행지속 여부 등과 같은 현안들이 제기되면서 한·러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특히 소련 방 붕괴후 러시아가 직면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도 한국정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러 접근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북한 핵문제의 대두로 한국의 정치·외교적 관심이 대북관계, 대미관계에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한·러관계를 급진전시켜 주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3기는 1994년 6월 초부터 1998년 여름까지로 러시아의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의 강화와 한·러 양국간 '건설적이고도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모색된 시기이다. 실제 체르노미르딘 총리가 한·러 수교 5주년을 기념하여 1995년 9월중 방한하였고, 이를 계기로 양국은 경제·과학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년 7월에는 그라초프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군사협력 및 인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는 또한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1961년 7월 체결한 조·러 군사동맹조약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다른 조약, 즉 한·러 기본관계조약과 유사한 조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1995년 8월초 북한측에 통보하였다. 러시아는 또한 한국의 월드컵 유치를 지지하였으며, UN 등 국제무대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한국도 러시아의 APEC 가입 및 KEDO 참여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한·러 정치·외교관계는 한편으로는 총선 및 대선, 엘친 대통령 건강 이상 등과 같은 러시아의 국내정세 및 미·중·일 등 주요

강대국에 대한 외교지향,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핵문제, 4자회담 등과 같은 한국외교 당면현안의 탈러시아화 및 러시아의 APEC, ASEM 미가입에 따른 양국 대통령의 회합기회 부재 등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정상회담이 부재하는 등 일시적이거나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제4기는 1998년 여름부터 현재까지로 양국간 정치·외교관계의 조정 및 실질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시기이다. 실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변 4대국 보장은 제시 등 그 동안 주변 4국과의 정치·외교 관계 강화를 주장해 오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취임함에 따라서 양국 정치·외교관계가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작년 7월초 발생한 양국 정보수집 외교관의 맞추방과 이를 둘러싼 양측 외교담당 부서간 심각한 이견 및 갈등이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서 당분간 양국관계가 냉각, 조정기에 접어들었다.⁸⁾

이후 양국은 소원한 양국관계는 상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였고, 금년 5월말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양국은 실질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실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⁹⁾

(2) 대북한 접근정책의 강화

탈냉전기 러·북관계의 발전 추이는 대체로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

8) 한·러관계의 발전과정 및 김대중정부의 대러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재남, “신정부의 對러 외교정책 방향,” 『中蘇研究』, 제22권 제3호 (1998, 가을), pp. 37~63 참조.

9) 한·러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후 채택한 공동성명은 *The Korea Herald*, *The Korea Times*, May 29, 1999 각각 참조.

떠볼 수 있다.

제1기인 양국관계의 소원기는 1987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한·소 수교이전까지만 해도 군사적·이데올로기적 유대에 기초하여 모든 분야에서 우호·동맹관계를 유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따른 소련의 대내외 정책 및 환경의 변화, 특히 1987년부터 신사고에 입각한 외교정책은 양국관계를 점차 악화시키기 시작하다가 소련의 '88 서울올림픽' 참여와 2년후의 한·소수교는 양국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부터 북한의 대소련 적대정책은 가시화 되었는데, 예를 들어 북한은 한·소수교 직후에 당기관지에 발표한 논설에서 “달라로 팔고 사는 외교관계”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하여 “소련이 사회주의 제국으로서의 존엄과 체면, 동맹국의 리익과 신의를 23억 달러에 팔아먹은 것이다”¹⁰⁾ 라고 비난하였다. 러·북관계는 북한의 군, 정부, 당내 강경·보수 세력에 의하여 주도된 1991년 8월에 발생한 쿠데타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와 러시아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에의 참여로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또한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민주화를 위한 개혁정책들이 북한주민의 반체제활동을 고무시키면서 체제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러시아의 반공산주의 세력이 한국·미국·일본 등의 반북한 연합전선에 동참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였고, 이러한 북한당국의 반러시아 감정은 러시아의 경제원조 중단에 따른 자국의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증폭되었다.

10) 『노동신문』, 1990. 10. 5.

또한 러시아로부터의 방산 물자 및 기술 공급중단은 북한의 군사력 증대계획을 좌절시켰고, 북한당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과 같은 비상조치를 강구하였다.¹¹⁾ 러·북관계는 1992년 초에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데 비하여, 북한과의 정치적 접촉은 아예 무시하여 버렸다. 실제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992년 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지시키기 위한 압력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북한과의 모든 군사협력을 중지시킨다고 선언하였다. 엘친 대통령 또한 「조·러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 조약」이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고 선언하였고, 공보장관 폴토라닌도 일본 방문중에 북한의 전제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서라도 일본은 전쟁배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엘친정부는 별목공의 한국 귀순을 방조하였으며, 별목공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신임업협정」에 명기토록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또한 엘친정부는 35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상환을 북한측에 독촉하였으며, 북한에서 생산된 품질이 열악한 상품들의 구입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엘친정부는 북한의 군사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행기로 모스크바를 떠나 북한으로 출발하려던 무기관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체포하였다. 또한 엘친정부는 김일성의 과거를 밝히는 데 앞장섰고, 1994년에는 한국전쟁 관련자료를 한국정부에 넘겨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양국관계의 악화로 이 기간 동안 장관급 이상의 고위인사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러시아의 경우 1992년 로가초프 외무차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과거의 이념적 특수관계의 성격이 배제된 양국간 선린관계 유지를 피력하였으며, 모든 협력관계가 호혜원칙에

11) *Izvestiia* (nd)

입각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다. 또한 그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안 전협정의 서명과 사찰 등 국제적 의무의 이행과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측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하였다.

또한 1993년 1월에 평양을 방문한 쿠나제 외무차관은 북한이 NPT를 준수하고 IAEA가 요구한 두 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쿠나제는 소련이 북한과 체결하고, 현재 러시아가 계승한 모든 조약을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희망하였으며, 북한의 「화학무기 금지협정」의 가입을 촉구하였다. 군사협력도 신생 러시아 출범후 삼소노프 CIS합동군 참모총장의 북한방문(1992. 3.) 등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는 했으나 러시아가 북한 핵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한 국제공조체제에 동참하고 한-러간 군사협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러-북한간 군사협력이 중단되었다.

경제교류 및 협력도 소련이 1991년 양국간 무역관계를 과거의 우호가격 및 바터제에서 국제가격에 기준한 현금 지불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급격히 악화되었다. 즉 1991년에는 양국간 총교역량이 전년의 25억 6,000만 달러에서 88% 감소한 4억 7,000만 달러로 급감하였다.¹²⁾ 양국간의 총교역량은 비록 감소율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감소하여 1992년에는 2억 9,200만 달러, 1993년에는 2억 2,700만 달러, 그리고 1994년에는 약 6,000만 달러로 급감하였다.¹³⁾

제2기는 러시아의 대북 접근정책이 가시화된 시기로서 1994년부터 1998년까지가 해당된다. 러-북관계는 1994년부터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균형정책을 강화함에 따라서 점차 회복되었다. 예를 들어, 엘친

12) *East Asian Review*, Vol. 7, No. 1 (Spring 1995), p. 53.

13) V. Yakubovsky, "Economic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DPRK: Problems and Perspectives," 한양대 중소기업소 주최 세미나(1995. 5. 3)에서 발표된 논문임.

대통령은 김일성사후와 북한정권 수립일에 전문을 보내 “양국간 관계발전이 두 나라의 이익에 두합되며 조선반도의 안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파노프 외무차관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여 경제분야를 비롯한 러·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반조치들에 관해서 협의하였는데, 일부 보도는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¹⁴⁾ 북한당국은 또한 극우민족주의 정당인 자민당의 당수 지리노프스키를 1994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평양으로 초청하여 북한 노동당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였다. 한편, 러시아내 공산주의 노동당은 북한 노동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등 친북 정당활동을 강화하였다.

북한과 선린·우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러시아의 대북 접근정책은 1995년에도 계속되었으나 북한이 제네바핵협상 타결후 대미 관계개선 및 대일 관계개선에 외교정책의 우선성을 부여함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는 북한의 대외정책이 한편으로는 경수로지원협상과 미·일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대미 평화협정의 체결 등 안보외교에,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한 경제난과 홍수피해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외교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는 이러한 안보·경제외교의 고려대상에서 우선 순위를 차지할 수 없었다. 또한 동년 8월 러시아의 평양당국에 대한 군사동맹조약의 폐기통보는 그 동안 양국간 문서상으로나마 지속되었던 러·북간 이데올로기적·군사적 유대관계가 단절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서 북한의 대러 관계를 더욱 소원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관계 개선노력은 1996년 들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물론 하기와 같은 국내외적 요

14) 일본의 「週刊文春」 1995. 1. 5.

인, 즉 외교·안보정책의 보수·민족주의화와 미·일의 대북 영향력 확대와 이에 따른 동북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쇠퇴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한다. 실제 열린 대통령은 1996년 4월 12~14일 사이에 파노프(Alexsandr Panov) 외무차관과 이그나텐코(Vitaly Ignatenko) 부총리를 평양에 보내 북한당국과 소연방 붕괴후 처음으로 「러·북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케하고 북한의 정전체제의 무력화조치에 따른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러시아는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소연방 붕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대북 경제지원을 약속하였다. 양국이 합의한 「경제·과학 의정서」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경제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경화부족을 고려하여 구상무역형태의 교역확대와 에너지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상태를 고려할 때 러시아의 이러한 대북 경제지원 약속이 얼마나 실행이 옮겨질지는 의문이나 이번 합의는 러시아가 지난 6년간 냉각되었던 러·북관계를 경제지원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정상화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복원시키겠다는 강력한 외교적 의지를 들어내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러 양국은 1997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평양과 모스크바에서 신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며, 전년에 이어 10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제2차 「러·북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분야에서 양국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필요한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1998년중 북·러 양국은 3월 모이시예프 아주국 부국장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신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며, 예정된 제3차 러·북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러한 양국관계의 담보상태는 러·북 양국이 상호관계에서 시급히 추구하는 국익이 부재하여 급속한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정국현안 등 때문에 국내정책 우선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다. 그러나 1998년 가을 러시아에서는 공산당 등이 내각에 참여하는 중도좌파형 프리마코프 내각이 출범하고, 북한에서는 제10기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헌법개정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김정일 시대가 개막되어 양국관계의 개선여지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제3기는 양국간 선린·우호·협력 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시작된 선린·우호·협력 관계의 복원기로서 1999년 봄부터 시작되었다. 러·북간 과거의 군사동맹관계를 청산하면서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러시아 외무부가 1995년 8월초 과거 35년간 유지되어온 「러·조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1996년 9월 10일 연장시효가 만료될 시 폐기하고, 다른 조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통보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한국은 이 조약의 폐기를 주장하였고, 러시아는 변화된 국제정세와 러·북, 러·한 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러·북 양국은 1996년 9월 신조약의 초안을 상호 교환한 후 1997년 말까지 동조약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하에 1997년초 평양에서 1차회의를, 동년 6월 모스크바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러시아 외무부 아주국 부국장인 모이시예프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동 조약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큰 진전이 없다가 1999년 3월 중순에야 카라신 외무차관의 평양방문시 신조약, 즉 「우호, 선린 및 협력에 관한 조약」(Treaty of Friendship, Goodneighborliness and Cooperation)이 가서명되었다.¹⁵⁾ 동조약은 금년중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평양방문시 정식으로 체결될 예정이다.

15) 「연합통신」, 1999. 3. 20.

양측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삭제에는 합의하였으나, 북한측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러시아가 지지한다는 글귀를 기본조약안에 포함시킬 것과 대한민국 무기판매를 중지해 줄 것을 주장해, 최종 합의를 아직까지 이끌어 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아직 조약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동 조약은 러시아가 몽골·베트남과 군사동맹조약을 우호관계조약으로 대체할 시 삽입한 “안보위협 발생시 상호협의를 위한 즉각 접촉”을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조약의 체결은 그간의 불분명한 러·북관계를 해소하면서 향후 양국관계를 선린·우호·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제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과 러시아의 입장

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방안과 주요 이슈

1945년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남북분단과 이후 고착화된 한반도 냉전구조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난 50여년간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발발은 물론 남·북한간 극심한 이질화, 민족역량의 분산과 저발전, 이산가족의 슬픔지속 등의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특징은 첫째, 남·북한간 정반대의 정치·경제체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둘째, 남·북한이 서로 자기체제 중심의 통일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며, 셋째, 남·북한간 상호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넷째, 장기간 교류단절과 이로 인한 상호불신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 등이다.¹⁶⁾

남·북한은 그 동안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면서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이를 통한 평화통일의 달성을 위하여 수많은 제안을 해 왔으나 양측간의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¹⁷⁾ 현재 남·북한은 미국·중국과 더불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본회담을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분과위 의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아직 큰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정치·군사적인 상호신뢰를 회복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한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남·북한이 또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 중이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 위협하고 있는 비군사적, 군사적 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노력에 협조할 경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
- 16) 朴尙植,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동북아시아 협력,”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공동주최, 「동북아시아 지역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학술세미나(1999. 4. 16) <기조연설>, p. 4.
- 17)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노력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고.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세종연구소 연구총서 98-05 (서울: 세종연구소, 1998), 제3장; 곽태환 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특집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방안,” 재단법인 아태평화재단, 「평화논총」, 제1권 제2호 (1997년 가을/겨울).

<표 1> 냉전구조의 해체과정과 주요 이슈¹⁸⁾

<p>제1단계 (정전체제의 유지): 군사정전위 기능 정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협정 준수 및 관련 감시기구 재가동 - 지하 핵의혹시설 해결, 한·미·일의 포괄적 대북접근 - 남북대화; 4자회담 지속; 미, 일의 대북 고위급 대화채널 유지
<p>제2단계(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평화 체제 기반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합의서 상의 분과위 및 공동위 가동 -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세부 이행조치 마련 및 실천 - 미사일 문제해결 - 한·미·일 대북지원 본격화 (북한의 국제경제 및 금융기구 가입 포함) -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연락사무소 설치, 미·일의 대북 수교협상 본격화
<p>제3단계(평화체제 구축):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간에 신뢰관계 및 교류협력관계(평화공존을 위한 제반 조건) 정착 - 영변 특별사찰, 북한의 생화학무기금지협정(BWC, CWC) 가입 - 미국 및 일본의 대북 수교 -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의 실현 -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및 국제적 보장 - 주한미군의 지위문제 해결

18) 김성한, “페리 訪北 이후 北·美關係 展望,” 「主要國際問題分析」(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1999. 6. 23), p. 8.

이상과 같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과정이 북한의 협조여부에 따라서 각 단계가 동시적으로, 그리고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신속하게,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대중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이해제고와 협조, 그리고 냉전구조해체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주변 4강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방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한간 고위급 대화, 미·북간 고위급 회담, 4자회담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주요 이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1) 남북대화 및 한반도 통일문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 등 정치·경제 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대화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외부세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남북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한반도 통일로 자국에 적대적인 통일국가가 탄생하지 않는 한 러시아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한반도 통일을 주변 어느 국가보다도 지지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한국이 통일될 경우 지역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 경우 중국과 일본의 역내 패권주의에 대항하여 연합할 수 있는 국가는 통일된 한국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일한국은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발전은 물론 러시아의 아·태지역으로의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통일한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보위협국가라기 보

다는 동반자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국가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은 단기간에 달성되기보다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작업으로 파악하면서 한국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는 통일한국과 러시아의 향후 정치·경제체제간 유사성을 증대시키면서 제반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폭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통일한국은 대외관계, 특히 대미관계에서 외교정책의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는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심화,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김정일정권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통일보다는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점진적, 평화적으로 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만약 주변 3강이 이에 개입할 경우 러시아도 인접국가로서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러시아는 김정일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난민문제, 주변 4국간 세력경쟁 촉진 등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4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문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 등 정치·경제문제에 대한 남·북한 당사자주의를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같은 군사·안보문제는 그것이 한반도문제만이 아닌 동북아지역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관련국이 참여하는 '다자 국제회담' 형식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1996년 4월 북한의 정전협정의 무력화조치에 따른 한반도의 불안정을 극복하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 4자회담’을 제안하자, 러시아는 자국이 배제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피력하였다. 심지어 러시아의 북한전문가 및 외무성관리들은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회담의 성사에 지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문제는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의 평화 및 안정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런 형태의 다자회담의 당사자라는 입장에 기인한다. 또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4자회담에서 자국이 배제된 데에 깊은 불만을 가졌다.

한편 파노프 당시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옛 정전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정전체제, 즉 새로운 평화체제가 확립된 이후에 폐기되어야 한다”¹⁹⁾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러시아는 최근 들어 한반도 4자회담이 개최되어 오고 있고, 당사자주의를 강조하는 한국의 설득노력에 힘입어 1997년 7월 외무장관 공동성명을 통하여 4자회담이 성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으로 기존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 문제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일정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19) *Itar-Tass* (July 24, 1995).

(3)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문제

러시아의 대북 핵정책은 첫째, 북한을 NPT체제에 묶어두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회의의 개최, 둘째,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과거 러·북간 원자력 협력을 기초로 한 발언권과 영향력의 행사 모색 등이었다. 따라서 소련은 북한에 압력을 넣어 1985년 12월 북한의 NPT가입을 성사시켰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어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 안보이슈로 등장하자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조함과 동시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자회담'을 제의하기도 하였다.²⁰⁾ 우여곡절 끝에 제네바에서 북·미간의 핵협상이 1994년 10월 21일 타결되었는데, 러시아는 이를 크게 환영하면서 러시아형 경수로를 채택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기도 하였다.²¹⁾

러시아는 작년 8월 31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 및 헌법개정에 맞추어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주변 3강과는 약간 다른 입장을 보였다. 즉 러시아 라흐마닌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주변국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 주었다"고 밝히고, "모든 국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어떤 국가를 위협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²²⁾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동북아 안보환경의 유동

20) *Diplomaticheskij Vestnik*, No. 7-8 (April 1994), pp. 29~30.

21)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북 핵협상의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윤덕민, 「대북 핵협상의 전망」 한국전략연구소 총서 (서울: 해르, 1995).

22) 고재남,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회복정책과 한반도 정책전망," 「자유공론」 (1998. 9)에서 재인용.

성 증대는 역내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회의의 필요성과 동북아시아 다자안보체의 확립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켜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러한 러시아의 논평은 일본·미국의 강력한 대응 및 중국의 비교적 소극적 대응과 약간 달리하고 있다.

(4)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협력

러시아는 과거 브레즈네프시대 때부터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집단안보체제'를 제의해 왔다. 예를 들어,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1969년 「아시아지역 집단안전조약」(Asian Collective Security Pact),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아시아판 헬싱키회의」, 1989년 5월 「전아시아 과정」(All Asian Process) 등을 제안하였다.

엘친 대통령도 1992년 11월 방한시 국회연설에서 아태지역내 다자간 대화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관리를 위하여 「아태지역 분쟁방지센터」와 「아태 전략문제연구센터」 등을 설립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며, 그라초프 전 국방장관은 1994년 4월과 1995년 5월 각각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²³⁾ 러시아의 이러한 친다자주의적 국제주의는 역내에서의 발언권 유지 및 역내 안보문제에 대한 개입의 정당화 등을 위하여 주장되어 왔다.

(5)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작년 2월말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전임정권이 북한붕괴를 염두에

23)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 약화된 자국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다자주의는 역내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유지시키고 역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Kortunov, *op. cit.*, p. 11.

두고 봉쇄와 화해 정책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남한의 흡수통일 배제,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 등과 같은 대북정책 3원칙과 햇볕론에 의거하여 정경분리적 대북포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는 첫째,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전쟁을 방지하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 북한체제의 연착륙 유도과 이를 통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²⁴⁾

러시아는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대북정책과 김대중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대북정책이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주한 러시아대사인 아파나시예프는 외교안보연구원 초청세미나에서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수년 동안 처음으로 한반도정세를 크게 호전시킬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이는 어떠한 시한설정(deadline)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⁵⁾ 열린 대통령도 지난 5월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천명하였다.²⁶⁾

24) 안승국, “한국의 대북한 정책 과제와 발전전망” 국가안보정책연구소, 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주최, 「한국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 발표논문, p. 1.

25) 아파나시예프 대사의 발표내용은 다음 문헌에 잘 요약되어 있다. Evgeniy Afanasyev, “Lots of Sunshine Needed to Resolve Korean Questions”, *The Korea Times*, May 27, 1999.

26) *Itar-Tass*, May 28, 1999.

(6) 기타: 주한 미군문제, 미·일의 대북 수교문제

러시아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 미·일의 대북수교를 통한 남북한에 대한 주변 4국의 교차승인 조기완료와 북한의 국제기구 활동의 참여 등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대남도발을 억제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중·일간의 군비경쟁을 약화시키면서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에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NATO의 동진과 더불어 한·미·일 동맹관계를 동북아시아내 NATO형 대러 견제 군사블럭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한반도 통일 이후 미군주둔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아직 표명되지 않고 있다.

4. 결론 및 한국의 대응

최근 들어 한반도정세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추진으로 그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따라서 남·북한간 상호협력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북·미 핵협상 타결과 KEDO사업의 지속적 추진, 수차례에 걸친 4자회담의 개최, 김정일체제의 확립과 이에 따른 보다 실용주의적 대외정책의 추진 가능성 증대,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추진과 주변 4강의 적극적인 지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 미국의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에 기인한다.

물론 북한의 기존 대남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남·북한간 무력충돌의 가능성 및 미·일의 대북적대정책의 심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한·미·일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대북협상 및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수용하고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는 크게 안정화되고 그만큼 남·북한간 평화통일의 가능성도 증대될 것이다. 또한 주변 4강의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 희망 및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지지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변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반도 균형정책은 기존의 한·러관계를 강등시키기보다는 그 동안 소원했던 러·북관계를 정상화시켜 선린·우호·협력관계를 확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러·북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 점증하는 정치·경제체제간 차이, 한반도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우선정책, 러시아의 현실적인 남한 중시주의 등은 양국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북 접근정책, NATO의 유고공습과 이에 따른 북한의 대미 위협인식 증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발사에 따른 미·일의 TMD 공동개발 등 대북압력 증대, 김정일정권의 대러관계 복원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은 러·북관계 개선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중기적으로 러·북 양국은 신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선린·우호·협력관계를 심화시키면서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제한적이거나 군사협력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방향은 대체로 한국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러한 정책방향이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4강이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과정에서 대립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4강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대러정책 관련,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⁷⁾ 첫째, 러시아의 한국 중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러시아의 대북 접근정책은 러·북관계를 과거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로까지 회복시켜 줄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양국관계를 점차 선린·우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줄 것임에 틀림없다. 러시아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국 관계에서도 압박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북한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와 굳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대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한국 중시정책이 계속 유지되도록 러시아와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소보사태의 해결과정,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지리적 인접성, 러·북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는 약화된 국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둘째, 우리 정부는 주변 4국 외교의 균형·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향후 동북아질서는 중국과 일본의 지역적 위상과 영향력 강화로 한반도 주변 4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다극화된 지역질서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미·일의 한반

27) 고재남(1996), pp. 61~66.

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시도와 전통적 영향력을 고수하려는 러·중간의 대립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갈등(예: NATO 확대를 둘러싼 미·러간 갈등, 대만문제, 인권문제 등을 둘러싼 미·중간 대립,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간 대립, 남사군도를 둘러싼 중·일간 대립, NATO의 유고공습 등)과 결부되어 더욱 심화되면서 주변 4국간 안보구도를 ‘느슨한 미·일 대 중·러간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양극적 대립구도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과정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상기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향후 한반도 안정 및 평화유지, 그리고 평화통일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국가이다. 경제적으로도 한·러 양국은 상호보완성이 매우 높아서 상호 경쟁국이라기보다는 협력상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비록 한국외교가 현실적으로 대미·대일 중시정책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한국은 그 동안 주변 4국 중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관심을 기울였던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관심을 제고하면서 평화통일과정에서 호의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러외교 비중을 확충, 주변 4강에 대한 균형되고 조화된 외교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의 체제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협차관 상환 및 경제회복은 단기간 내에 불가능할 것이나, 한국은 수출시장(러시아, 구 소연방 구성국 및 동구국가들) 및 원료 공급지 확보, 첨단 과학·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장기적인 고려에서 기업들의 대러 경제협력과 투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의 체제전환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인구, 영토, 산업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방대한 수출시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이전 및 원자재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어느 국가보다 많다.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작업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향후 누가 집권한다고 해도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경제적 번영이 우리의 경제발전과 번영에 고 크게 기여할 것임을 인식,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국간 신뢰회복 등 포괄적 관계개선 방안을 마련, 이를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 몇 년 동안 한·러관계가 소원했던 것은 양국의 국내외 사정에 따른 적극적인 상대국에 대한 정책추진 부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수교초기 가졌던 상대국, 특히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서 신뢰감이 상실된 것도 한 요인이다. 따라서 포괄적 관계개선방안에는 우리 국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 러시아내에 영향력 있는 친한·지한 인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 문화·예술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러시아의 대북 무기수출 등 군사협력을 억제시키기 위한 한·러 군사협력 확대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토 론 〉

사회자: 세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은 잘 아시다시피 통일 연구원 그리고 외교안보연구원의 젊은 학자들입니다. 젊은 학자들로서 상당히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셨고 또 그 내용에는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분은 다섯 분인데 대체로 중진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 분야의 전공자들입니다. 맨 처음 토론에 임해 주실 인하대학교 백광일 교수님은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학위를 하시고 인하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강의하고 계신 분입니다. 작년에는 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및 사회과학대학원장으로 재임중이십니다. 다음 송영선 박사님은 하와이대학에서 학위를 하시고 주로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셨는데 안보문제 특히 일본과 한국과의 안보협력문제를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많은 저서도 내시고 여류학자로서 국제회의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양승함 교수님은 연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학에서 학위를 하시고 귀국해서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전공분야는 주로 러시아입니다. 유승남 교수님은 국민대학교 교수로서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학위를 하시고 주로 러시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진 교수는 미국 Mckenna College에서 학장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많은 저서를 갖고 계시고 특히 미국의 일본·중국·한국에 대한 정책과 남북한관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시겠는데 주최측에서 지정된 토론주제가 있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토론자는 10분 이내로 토론해 주시고 질의응답후 시간이 허락하면 방청객들로부터 질문도 받겠습니다. 그러면 백광일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일 교수: 안녕하세요? 백광일입니다. 이런 훌륭한 자리에 초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박종철 박사의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의 주제인 냉전구조의 해체방안을 중심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탈냉전구조 특히 한반도에서 냉전구조 해체방안이라는 말이 일종의 유행어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해체되어야 하는가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종철 박사의 논문을 읽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냉전의 성격이라든지 또 그 시대적 구분이라든지 우리의 정책적 목표들까지도 분명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토론할 여지가 없는 아주 훌륭한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냉전구조 해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냉전이라고 하는 논리만 가지고 설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7페이지를 보면은 미국·남북한의 정책목표·정책과제·정책수단들을 냉전·냉전구조로 설명하셨는데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구상이라든지 하는 다른 측면을 냉전이라고 하는 논리만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냉전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1917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주로 2차대전 이후 미·소간의 갈등현상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갈등을 중심으로 설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외적 환경과 관련지어, 제가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한반도의 제로섬 게임적인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정책의 대안으로서 일차적으로 교차승인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요즈음에는 냉전구조의 해체방안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포함시켜,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냉전구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차라리 한반도 평화공존체제 확립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냉전이 한반도에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책을 보든 세계적으로 탈냉전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한반도에서만은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냉전체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면 현 시점의 문제보다도 통일이후의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 보는 구조적인 해체방안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북한이 붕괴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통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가들의 한반도에 대한 국가이익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현상유지적인 측면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대전 이후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난번 코소보 사태에서도 보았습시다만, 한반도에도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들어와 지분을 얻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과 협상을 벌여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먼 장래를 보면서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주변국가들의 이익에는 변화가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의미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관련하여 정책수단과 정책목표를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통일의 목표로 볼 것인지, 하나의 과정으로 볼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북한·한국을 중심으로 분석이 되면서 현재 한·미간에는 상당히 조율이 잘 되어 대북정책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대북포용정책에 있어서는 한·미간에 기본적인 목표를 같이 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포용정책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도 냉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보고 있는 포용이라는 것은 engagement적인 측면인데, 우리의 포용이라는 것은 초기 햇볕정책(sunshine policy)가 비판을 받으면서 말을 바꾼 것으로서 서로 상당히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한·미간에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적인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 미국과 대북정책에 상당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 단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때 상당히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북한의 정책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이 상당히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북한에 무조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일반국민들은 의혹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번 민간인 억류사건 이후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채널이 전혀 없었고 민간기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서해안사건, 즉 ‘연평도해전’이라고 합니다만, 이 해전 이후 상황들이 바뀌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그러나

관광을 재개하는 과정을 보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 버렸습니다. 특히 이러한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이야기도 있어 앞으로 미사일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대북정책에 대한 조율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대상과 관련하여 내부차원에서 북한의 정책 변화를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북한의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6차 4자회담에서 보았듯이 북한은 기본적인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냉전구조 해체를 추진하여 냉전적·법적·제도적 관행으로서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북한이 요구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같은 선상에서 우리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타파를 원한다면 우리의 주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사적 갈등구조의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및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문제 등을 냉전구조 해체와 연계시켜 본다면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발언을 보면 조율되지 않은 정책적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해안 교전 이후 북방한계선 설정문제, 주한미군 지위문제, 북한제재문제 등과 관련하여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한·미간의 공조체제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정책을 따라가는, 우리

가 주도적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북 대응전략이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박사: 통일연구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열기를 보아 냉전구조가 분명히 해체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배박사님의 논문을 중심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배박사님은 일·북관계 문제가, 이는 나머지 발표자들도 공통된 의견이지만, 양 당사국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동북아국가, 더 나아가서 글로벌한 차원의 문제와 함께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는 견해를 표출 하셨습니다. 특히 배박사님은 이를 5단계의 다른 차원으로 국내문제에서 아주 글로벌한 차원까지 나누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배박사님은 탈냉전시대의 일·북관계를 4개의 시기로 분류하셨는데 이는 특정한 시간상의 분류라기보다는 일·북관계의 관계 발전이나 그 양상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거의 동감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통일정책의 입안이나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학술적인 문제보다는 정책상의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논평하고 싶습니다.

먼저 큰 틀에 대한 질문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일·북관계에 있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하고 혹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북·일관계 개선을 논하는 논문의 요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일본은 두 개의 한국, 즉 남한과 북한을 양손에 들고 주변국과의 대외정책이나 국내정책의 합수를 필요상황에 따라서 조절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북수교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볼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북·중관계에 대한 최소한 레버리지(leverage) 확보, 또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권 행사를 위한 근거 확보라는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일·북관계를 끌고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돈입니다. 36년간의 보상 그리고 전후배상을 북한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이해하면서 일·북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배박사님 용어를 쓰면 ‘접촉’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수교가 되지 않은 상태, 배박사님 용어를 빌리면 ‘갈등’ 상태로 남아 있는 것, 아니면 무관심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북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지원, 즉 전후배상이라든가 36년간의 보상이 한반도 통일비용의 일부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배박사님의 논문에 의하면 북한이 50억 달러 정도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수치의 출처는 다양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출처에 의하면 북한은 약 12조 엔, 약 100억 달러인데, 1990년 8월 8일에서 1991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걸프전에 들어간 돈의 약 8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북의 수교는 북한 붕괴를 분명히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 자위대의 역할 증대나 방위력 증강에 대한 명분이 약화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 구체적으로 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북·일관계가 미수교상태 내지는 갈등상태를 유지할 때에는 접촉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교상태로 남아 있을 때에는 일본이 한반도통일에 관여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일·북수교에 대해서 우

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일본과 북한이 대화와 억지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인가? 세 번째로 일·북수교가 한반도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가? 이 세 문제를 배박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토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적은 문제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0년 9월에 가네마루 신이 묘향산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는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하기 위해 간 것은 아닙니다. 자민당 집권하에서 사회당과 자민당과의 국내정치의 갈등의 요인으로 인해 가네마루 신이 북한에 갔지만, 배박사님의 논문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일본은 8차까지의 회담을 사전에 미국과 조율하지 않은 상태이었던 때문에 미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의 4대 외교정책중 하나인 비확산정책이 적용되어야 함에 따라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접근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고 회담을 거듭할수록 북한의 핵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8차 회담의 결렬된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이은혜문제가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박사님 논문에는 여러 차례 대포동 1호와 대포동 2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포동 1호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닙니다. 아주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한·일간의 협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각 나라마다 미사일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유엔군축국에서 쓰는 미사일 정의를 보면 500km 이상이 전술미사일입니다. 500~1,000km의 사정거리가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1,000~5,000km를 중거리 미사일로 봅니다. 5,000km 이상을 ICBM, 즉 대륙간 탄도탄으로 봅니다. 물론 이 정의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 ICBM은 8,000km 이상이어야 되고 사정거리 3,000~8,000km까지

는 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포동 1호가 실제로 발사된 거리는 1,600km입니다. 「'99 일본방위백서」와 미국의 연례보고서인 「제임스 디펜스」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8월 31일 발사된 것은 이단으로 된 것입니다. 발사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발사된 것이 두 번인데 발사체를 포함하지 않은 단이 두 개입니다. 아래 있는 단이 노동미사일인데 노동미사일 사정거리는 1,000~1,100km입니다. 그 위에 올려 놓은 것이 스킨드 B라고 보고 있는데, 사정거리는 300~900km입니다. 실제로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된 지역에서 일차가 떨어진 것은 1,100km의 지점이고, 이차로 떨어진 지점은 1,600km입니다. 1,100km가 중요한 것이 1,040km까지가 일본의 영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에서 일본까지 오는 동안 영해가 아닌 지역도 있지만 그것이 영해를 걸쳐 영해를 불과 60km 나간 지점에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60km 나간 지점에 떨어졌을 때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었던 높이는 80~100km인데, 80km 같으면 약 8만m이고 100km이면 10만m입니다. 실제로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는데 일본이 난리를 친 것입니다. 제가 장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배박사님이 말씀하신 대포동 2호의 사정거리가 6,000km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6,000km 같으면 일본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1,600km의 경우 발사체의 첫 번째의 추진체에서 떨어졌던 지점은 1,040km로서 일본에 위협이 되겠지만, 사정거리가 6,000km이면 발사체가 처음 떨어지는 지점은 태평양 한 가운데 아니면 거의 미국 본토에 가깝습니다. 그 때 비행하고 있는 높이는 300km입니다. 일본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포동 2호의 사정거리가 6,000km라고 일본이 난리를 치는 것은 스스로 무장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배박사님이 6,000km라고 주장하신 근거로 대포동 1호의 발사대가 20m였고 2

호의 발사대가 60m가 되니까 6,000km라고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성 1호가 인공위성이 아닐 가능성도 세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미사일 시험발사후에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생산능력이 전략적 교섭력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교섭력이라는 것은 생산해서 팔 수 있다는 능력인데, 북한 미사일을 살만한 제3세계 국가들이 사정거리 6,000km 미사일을 사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제3세계가 필요한 것은 전술미사일로서 사정거리 500~1,500km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함 교수: 연세대학교 양승함입니다. 오늘 좋은 학술회의의 토론에 참가하게 해 준 주최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토론 주제에 동북아 4개 주요 국가가 들어 있는데 그 중 중국 대신 러시아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중국은 지난번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셨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재남 교수님의 한-러관계에 관한 논문에 대해 토론하고, 그 다음에 냉전구조 해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고재남 교수님의 글에서 몇 가지 달리 생각하는 것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선 러시아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실태와 동북아정책 또는 아태지역정책을 통해서 대한반도정책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러시아 외교정책의 전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대체로 아태지역 중심의 외교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러시아 외교정책의 비중이 유럽쪽에서 아시아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고,

유럽과 아시아의 균형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균형’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러시아에게는 여전히 유럽쪽이 최우선이고, 소련붕괴 이후 2~3년간 소홀히 했던 아·태지역을 이전보다 좀더 중요시 여기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균형정책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프리마코프가 러시아 외무부장관으로 등장하면서 이런 정책을 더욱 추진했다고 합니다. 서구 일변도의 정책을 펴면서 구소련붕괴 이후 러시아의 국제적인 지위 및 영향력의 쇠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동맹국가들에 대한 영향력마저도 상실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아·태지역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구동맹국가들과 다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제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서구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동맹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중동지역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고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까지 들어갔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러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는데, 이런 분석들이 선언적이고 공식적인 관계쪽에만 치우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려면 선언적이고 공식적인 차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교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수행되는가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야만 그 나라의 외교적인 실체를 보다 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특히 한국의 경제력이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서 좋을 것이고 또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소수교 당시까지는 옳았지만,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불과 수년전부터 한국에 대한 평가가 거의 18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90도 정도는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소위 제3세계 국가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개발도상국 단계를 지나 선진국 단계로 올라가는 국가로 그리고 러시아경제의 부흥을 상당히 도와 줄 수 있는 국가로 보았다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보다 못하다고 대부분의 러시아 외무부나 학자들은 최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문화의 특성중 하나는 이중성입니다. 이중성이 라기보다도 양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련의 외교형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중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중성이 아니라 양극성입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상반되는 것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한반도정책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마코프가 박정수 전 외무부장관과 밀약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해서 한국의 입장을 외교적으로 난처하게 한 사태가 이런 증상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다면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러·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러·북관계가 개선되어 러시아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러·북관계가 밀접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냉전구조 해체방안을 강구한다면 가능한 한 러시아가 북한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많은 신중함과 조심성을 가지고 러·북관계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의 냉전구조와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공식선언문만 보면 러시아는 한국과 모

든 면에서 일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데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기능은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좀더 정확한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개입한다면 러시아도 개입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이나 연해주의 이해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코소보사태와 동일시 해서는 안됩니다. 러시아에게 한반도가 가지는 기본적인 이해관계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러시아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혈맹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를 혈맹으로 생각하는 미국인은 많지 않습니다. 코소보는 러시아에게 다른 더 중요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같은 슬라브족이기 때문에 세르비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형제자매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역사적·문화적인 요인이 코소보사태에 개입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문제에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다자주의를 말씀하셨는데 다자주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다자간 국제협력, 특히 안보·경제 등의 포괄적인 포럼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기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자간 국제협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여러 가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체제전환하여 민주국가로 가는 데 도움을 준다는 추상적인 것 이외에도 러시아가 북한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무기나 미사일 기술 하나만 전해 주어도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세계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러시아를 소외시켜서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러시아를 포용해 나갈 것인가,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주의를 반대하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고재남 교수님의 논문에 거론되지 않은 중국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러관계의 개선입니다. 1996년에 중·러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이루었는데, 전략적 동반자라는 것은 서구적인 군사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의미로 21세기의 세계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악화될수록 중·러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전략적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긴장관계를 갖기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긍정적인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는 의미는 한반도에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냉전시대의 구조, 즉 중국·소련·북한을 잇는 북방전략삼각관계와 한국·일본·미국을 잇는 남방전략삼각관계가 재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의 부제가 장기적·포괄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에 글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발표하신 분께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개념 설정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냉전구조 해체방안이 장기적인 방안이라면 좀더 구조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긴장완화를 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기본합의서나 평화체제 구축이 아닙니다. 평화체제 구축했다고 해서 냉전상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긴장완화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냉전구조가 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냉전구조가 해체된 것은 멀티회담을 통해서 입니다. 말

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주제는 탈냉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탈냉전은 사고와 행동양식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체제에서 탈냉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외교는 후루시초프나 브레즈네프가 했던 평화공존이나 긴장완화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냉전구조 해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남북합의서나 평화체제 구축은 긴장완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탈냉전이 되려면 북한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이 변하지 않아도 탈냉전구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 이전에는 전쟁 당사자간의 군비경쟁이 꼭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쟁방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축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더라도 남북한이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북한이 붕괴하든지 해서 군비를 감축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정일이 존재하는 체제안에서는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햇볕정책도 일환이지만 국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도와 주어 북한사회가 조금이라도 개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북한사회 내부는 상당히 불안정한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북한을 개방할 수 있는 모든 국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러시아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냉전구조 해체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남 교수: 국민대학교 유승남입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제 소속과 경력을 소개했는데 경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템플(Temple) 대학과 텍사스텍(Texas Tech)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다른 파일이 전달되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께서 제가 러시아를 전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

공분야가 비교정치·비교정책입니다. 남북한관계나 한반도 통일문제와 좀 거리가 먼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세 편의 논문을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기본적인 특징을 지우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종철 교수님과 배정호 교수님의 분석의 틀은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남북한의 내부상황,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 미국의 역할문제 그리고 5차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관계된 부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인식론적 입장에서 분명히 동일한 맥락입니다.

박종철 박사님은 세 가지 측면의 정책적 우선순위 또는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로 군사대립의 상태를 벗어나서 남북이 서로 화해협력하는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을 정책의 제1차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순위입장으로 보면 북한의 냉전적인 법적·제도적 질서를 변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경우에는 다자차원의 상호의존 내지 협력관계 증진, 이 세 측면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로 평화공존체제가 가장 중요하고 북한과 동북아에 관련된 차원은 거의 같은 순위로 치환한 감이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변화하고 동북아의 질서가 변화하면 평화공존체제가 올 것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전혀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에 대해서 경험적인 입장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내부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주변환경의 변화와는 관계가 없는가?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의 변화가 북한 내부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상호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이 두 차원의 인과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앞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좀더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중철 박사님은 미·일, 미·중, 미·북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 필요성·가능성도 어느 정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한반도에 관한 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대응논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정호 박사께서는 다자간 협력체제에 관해서 일본도 현재 4자회담에 소외되어 있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대해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동북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강국에 비해서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및 한반도와 관련해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러시아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북아질서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 갈 수도 있고 미·일 대 중·러 간의 대결구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모색하는 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고맙습니다. 제가 경력을 잘못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미진한 자료를 갖고 소개를 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채진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채진 교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Claremont Mckenna대학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팍태환 원장님은 미국 학계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요 또 오랫동안 학회에서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곽태환 원장님의 지도하에서 통일연구원이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표하신 세 분의 논문이 자료가 풍부하고 분석이 균형이 잡혀 있어 분석이나 결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들이 대단히 구체적·건설적으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39년 동안 해외에서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남북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논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보다는 남북문제 내지 한반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범세계적인 새 질서의 성격과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역질서의 성격을 과연 탈냉전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범세계적인 냉전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개 1947~48년부터 시작해서 1990~91년 끝난 것으로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양극체제는 끝났고 군사적인 동맹체제도 대립의 양상이 많이 완화되었으며 특히 대립의 양상으로부터 대화 내지 협력의 양상으로 범세계적인 국제질서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보다 실용적인 문제들, 경제문제, 인권문제 등에 대한 상호의존적인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탈냉전시대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면 과연 현 국제질서의 성격이나 향후 국제질서의 성격을 탈냉전의 성격으로만 규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중에는,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고조, 대만문제의 미해결상황 그리고 미·일 군사협력에 관한 지침문제, 북한의 미사일문제, 일본의

재무장문제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새로운 조약이 설정되었다는 이야기도 논문에서 나왔고, 또 러시아와 중국 사이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군사적 협력관계가 재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 핵문제나 미사일문제 등이 확대된다면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탈냉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거시적 의미에서의 문제를 다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제가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4개의 주변국가와 남북이 관계되는 6자구도라는 것이 대단히 유용적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동태적·유동적·복합적입니다.

세 분의 논문이나 혹은 토론 가운데 약간 미흡하다고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내정치적인 요소의 중요성입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모택동·주은래시대를 지나고 덩소평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지도자들의 세계가 되었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1971년 7월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한 이래 현재까지 비밀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공식 확인된 것에 의하면, 주은래 총리는 그 회담이 끝나자마자 북한으로 갔습니다. 김일성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1972년 2월에 북경을 방문한 이후 주은래는 새벽에 평양에 가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돈독한 혁명적인 유대관계를 가졌던 국내적인 요인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부치 총리의 대북정책 또한 국내정치적인 요인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민당의 세력이 약하고 연립정부하에 오부치 정권이 있다는 의미에서 국내정치적인 요인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39년 동안 살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만, 대외정책이라는 것은 국내정치적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린턴의 대북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화당이 의회를 점령하고 있고 공화당을 위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클린턴이 쉽게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

다. 한국의 햇볕정책·포용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경우도 김정일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고통치자라는 것에는 이론이 없지만 최근 군부의 부상, 노동당 국제부의 상대적 약화, 이와 같은 국내적인 요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냉전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로 남북 사이에 왜 협력이 안되는가, 1991년에 서명, 1992년에 발효된 기본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은 대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신현실주의입니다. 고교수님의 논문 가운데 제로섬 게임이 나왔습니다. 기존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은 남쪽이 열을 얻게 되면 북쪽은 열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의 결과는 제로가 되고, 이와 같이 대립의 관계가 있을 때는 협력이 안됩니다. 이것이 사고방식을 지배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현실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조금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도 신현실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협력을 통해서 모두가 얻을 수 있습니다. 남도 얻을 수 있고 북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협력이 안되는가? 절대적인 이득은 양쪽이 다 얻을 수 있지만 상대적인 이득의 격차가 클 때 협력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이 협력을 하고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통해서 남은 5를 얻고 북쪽은 1을 얻게 되면, 혹은 남은 10을 얻고 북쪽은 1을 얻게 되면 북쪽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이득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합의서에 대해 북쪽의 입장은 북쪽이 1을 얻고 남쪽이 9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90%는 남쪽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득의 격차가 커서 협력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

면 상대적인 이득의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이 협력을 계속 증진하면 곧 양자가 얻을 수 있다는 전자와는 반대의 이론으로서 이 경우 제3자의 개입이 있으면 협력이 더욱 잘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KEDO, 유엔개발기구(UNDP), 혹은 아시아개발은행(ADB), 혹은 이 논문에 나와 있는 ARF 같은 세계적·지역적인 기구의 개입을 통해서 혹은 미국이나 중국의 개입을 통해서 남북의 협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위 신기능주의라는 견해입니다. 전통적인 기능주의라는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비교적 비정치적인 분야로부터 협력을 추구해서 누적된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더 중요한 군사·정치적 문제로까지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신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협력을 계속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협력세력과 북쪽에 있는 보다 온건하고 실용주의적인 세력 간에 일종의 유대관계가 생겨서 이들을 위주로 보다 더 협력관계를 정진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북쪽에 이와 같은 세력이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북쪽에는 온건파도 강경파도 없다는 황장엽씨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에 실용주의적인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북쪽의 정책과정 속에서 나설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관계의 탈냉전구조를 변화시키고 방안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세 개의 이론적인 도구를 인용하여 남북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국제질서 변화의 성격을 잘 이해해서 한국이 보다 더 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제세력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방금 전 말씀드린 상대적인 이득문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측이 필요로 하는 상대적인 이익은 무엇인가? 체제의 존속인가, 김정일의 존

속인가, 아니면 경제적인 발전인가 혹은 개혁인가?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함으로 해서 편의상의 상호주의가 아니라 근본적인 상대적인 이득문제를 계산해서 남북이 기본합의서와 같이 9대1의 격차가 아니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이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는 실용주의적이고 온건한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들이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속에서 나설 수 있는 입지조건을 유리하게 유도해 줄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의의 제3자 활용이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적 내지 지역적인 기구일 수도 있고 이 논문에서 지적하는 다자안보체제라는 새로운 기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내년 11월 대통령선거까지 남북문제 해결이 잘 안 되면 한반도의 문제가 미국 대통령선거의 커다란 쟁점이 될 것으로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현재 공화당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선 접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한반도문제를 도마위에 올려서는 안되고 앞으로 공화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화당과 접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말씀드려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해외에 오래 살게 되면 한반도문제를 생각할 때 약간의 거리를 두고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동포학자들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종의 가교 역할 내지 중매 역할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채진 교수님, 종합적인 관점에서 잘 토론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발표하신 분들

의 응답을 들어보기에 앞서 회의전 원장님의 당부도 있고 하여 간단하게 부각된 몇 가지 주제를 강조하고 발표자들의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의미입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엇갈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포괄적으로 강대국을 포함해서 동북아시아 전체에 해당하는 냉전구조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강대국과의 관계를 떠나서 남북대결만 말하는 것인가? 예컨대 냉전구조에 강대국을 포함한다면 냉전구조 속에는 미·일동맹이라든지 한·미동맹, 주한미군문제가 반드시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냉전구조 해체하는 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 제기됩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반대로 전 미 국무장관였던 제임스 베이커가 1992년경 서울에 와서 “한반도는 냉전의 최후의 빙산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곳은 냉전의 빙산이 다 녹았는데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빙산이 녹지 않고 있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썼을 것입니다. 따라서 냉전구조 해체는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한반도문제를 단순히 남북한문제로 국한시킬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채진·백광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반도문제를 강대국관계로 분리할 수 있는가, 통일 이후에 러시아가 개입한다든지 중국이 개입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강대국들은 한반도문제를 강대국관계의 부수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한반도문제를 강대국관계에서 분리해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분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냉전이 해소된 곳에선 국내정치가 외교정치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특히 남북한과 주변 강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국내

정치 및 정국의 변화가 대외정책이나 남북한관계에 끼치는 영향은 큽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한관계를 국내정치에서 분류할 수 있겠는가? 다른 국내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화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국내정치와 분류해서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하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넷째는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면 남북한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정한 것 같습니다. 냉전구조를 해소하고 통일로 가는 여건을 우리가 마련하는 데 있어서 미·일·러의 역할은 오늘 회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통일환경을 주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발표자들의 응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고재남 교수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배정호·박종철 박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남 교수: 여러 선생님들의 토론과 사회를 맡으신 안병준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러시아지역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을 깊숙이 연구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련된 문헌들을 접할 수가 있었고 개괄적이거나 많은 지식을 축적시키는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이번 토론을 통해서 더 정리된 것 같습니다. 양승함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아·태지역으로의 외교정책 전환, 즉 러시아의 동서양에 대한

대한 균형정책이라는 것이 서양중시 정책이 유지되면서 동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북관계의 개선이 오히려 통일과정에서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설명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주변4국의 큰 관심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있습니다. 현상타파보다는 유지, 통일도 대화를 통한 점진적인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러·북관계가 너무 개선되다보면 외교정책도 자국의 국익 차원에서 수립·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너무 공식적인 선언문이나 문건들을 이용한 분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러시아관련 연구들이 너무나 다양한 견해들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내용화시키기에는 부적절한 때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식문건과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글을 정리하다 보니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벗어나면서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이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결정·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3국과의 세력균형 등의 측면들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지면이 허락되었다면 저도 주변 3국과의 관계설정과 그에 따른 러시아의 정책적인 고려와 한반도정책의 변화를 다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면관계상 다루는 주제관계상 이런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양승함 교수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정호 박사: 송영선 박사님의 논평은 유익한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문제는 최근의 문제라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제 논문에서 거론된 미사일 사정거리는 각주에서 밝힌대로 「통일 정보신문」에 의한 것입니다. 「산케이신문」은 또 다르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정단계이기 때문에 각주로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통일비용문제는 제가 통일문제를 볼 때 가장 마지막으로 봉착하는 문제입니다. 통일비용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북·일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일본으로부터 얼마 정도의 배상금이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배상금이나 보상금의 지원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0억 달러, 100억 달러는 언론상의 이야기입니다. 금년 2월과 7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과 북한 간에 배상·보상의 범위를 어느 정도할 것인가의 단계까지 가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외무성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 미사일문제, 일본의 배상문제 등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북·일관계 개선이 남북한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고 입장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일관계 개선 및 국교정상화가 북한의 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치대국을 추구하는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증진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통일환경을 조성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한이 문을 열고 북한에 많은 외부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의 개방에 영향을 미치므로 저는 통일환경의 조성에 긍정적 효과에 가져오고 아울러 통일비용 감소에도 긍

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간의 상호의존이라든지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적 부분을 볼 때 안보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반도는 일본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몰락할 경우 우리가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일후 한반도 경영에 필요한 과도한 비용으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휘청거리고 국가의 생존이 어렵게 되면 일본의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의 경우에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보장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비용문제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더욱 이 분야를 연구하겠습니다.

박종철 박사: 우선 백광일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질문해 주셨고, 유승남 교수님께서 몇 가지 접근시각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사회자인 안병준 교수님께서 총체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공통된 문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몇 분이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다차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과 남북관계 차원, 남북한 내부 차원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백광일 교수님과 양승함 교수님께서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동북아 역학관계 내지 양자 관계를 포함한 국제정치적인 외적인 규정력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평화체제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중첩된 개념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냉전구조를 해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의 범위를 어

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범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 또는 중장기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것을 현재 논의할 때는 북한체제의 완전한 붕괴를 통한 통일을 전제로 하기 보다는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공존구조를 잠정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이를 위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체제 자체의 변화라든지 통일을 상정한 동북아 체제의 재편성 등의 문제보다는 중기적인 범위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중간적인 범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한·미간의 정책간 공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차원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데 미사일문제나 핵문제 같이 국제적인 전략문제로 비약되면 우리의 선택 입지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한·미간 또 한·미·일간 입장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생겨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미사일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억지정책을 어느 정도 취할 것인지, 대북보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인지, 또 KEDO는 과연 유지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한 정책조정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의 기초를 유지해 가면서 문제를 풀려고 할 경우 우리에게 돌아오는 정치적인 부담, 대미·일관계에서 오는 외교적인 부담, 또 그 결과로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안보와 포용정책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안보를 통해서 대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또 대북억지를 위한 첨단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군사비용도 들어가고, 또 포용정책을 하기 위해 대북 정책의 비용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중 삼중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체제 전환이 아니라면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냉전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미국과 남북한의 정책과제와 정책수단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보상방안입니다. 이것은 개발지원 등 여러 가지 대북지원을 통해서 군사적인 위협수단을 제거하는 것인데 북한의 기본적인 정책목표나 체제속성상 모든 군사적인 수단을 경제적인 대가만 받고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한반도 군사안보관계의 변화, 즉 한·미동맹관계에 변화와 그것을 대치할 수 있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구조의 형성 등을 통해서 새로운 군사안보관계를 재조정하는 상황에서만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회의일정

< 세부일정 >

- ◆ 12:30~13:00 등록
- ◆ 13:00~13:20 개회식
 - 축 사: 한완상(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 개회사: 박태환(통일연구원장)
- ◆ 13:20~17:30 주제 발표 및 토론
 - 사 회: 안병준(연세대학교 교수)
 - 발 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미국·남북한의 3각구도와
한국의 정책대안**
 -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과 수교전망**
 - 배정호(통일연구원 연구위원)**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러시아**
 - 고재남(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토 론: 백광일(인하대학교 교수)
 - 송영선(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양승함(연세대학교 교수)
 - 유승남(국민대학교 교수)
 - 이채진(The Keck Center 소장/
Claremont Mckenna College 교수)
- ◆ 17:30~20:00 만찬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확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계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의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육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정영태·홍용표·박형중·허문영	공저	발간예정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정영태·홍용표·박형중·허문영	공저	발간예정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의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육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육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 Translation Series

-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7,000원
Regime Sustainability
-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6,500원
and Proposals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을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1998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